

언론중재위원회 정책토론회

종합보고서

- 남북 간 오보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책 -

■ 일 시 : 2018. 12. 4. (화) 14:30~16:40

■ 장 소 :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 이 발간물에 게재된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발간물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 인사말

언론중재위원장 이석형입니다. 매우 바쁘신 중에도 귀한 걸음으로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쌀쌀한 바람에 비까지 겹쳐서 겨울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최근 남북관계는 우여곡절이 있으나 훈풍의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불과 1년 전만해도 한반도는 금방이라도 핵전쟁이 터질 듯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쟁 대신 평화를, 갈등과 대결이 아닌 대화와 협력의 물결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정부뿐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에 남북 평화와 교류의 물꼬를 트는 노력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언론계 역시 예외가 될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국민은 언론이라는 창(窓)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합니다. 언론이 진실과 객관성을 잃으면 국민 또한 세상을 왜곡되게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북한을 비추어 주는 언론이 진실되지 못하고 객관성을 잃으면 그 결과는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남·북한의 진실과 평화와 번영은 우리 국민과 민족의 생존 조건이며 가치입니다. 그런데 65년 분단으로 인한 편견과 왜곡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데다가 북한에 대한 정보는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북한 관련 보도와 관련하여 언론이 매우 신중해야 할 이유입니다.

지난 날 어느 시기를 제외하고 남과 북은 분단의 장벽을 높이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남북 교류의 부재는 제한된 정보 속에 왜곡된 시선을 양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환경과 여건이 변화된 남과 북의 관계에서 남북의 언론교류가 매우 중요해졌다는 점에 동감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창인 언론이 남북 간의 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하고 동질성을 회복하는 데도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남북 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초석이 되어야 합니다.

독일 통일 과정에서 동독에 상주하며 객관적이고 진실된 정보 전달에 힘을 쏟았던 서독 언론이 기여한 바가 컸던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언론이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오랫동안 쌓여온 북한에 대한 불신, 반목, 적개심을 걷어내는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연구결과를 발표해주실 김영주 경남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명예 교수님과 신석호 동아일보 디지털뉴스팀장님, 지정토론자로 나서주신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님, 왕선택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님, 연합뉴스 통일 언론연구소 김중배 연구원님, 통일부 지승우 사회문화교류과장님, 그리고 토론회를 이끌어주실 정은령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팩트체크센터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가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북한 언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남북 간 언론 교류 방향을 진단하며, 그 언론보도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탄없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2월 4일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이 석 형

목 차

제1부 주제발표

[제1주제]

북한언론이론의 이해와 남북 언론보도의 실태 1

- 김영주 (경남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명예교수)

[제2주제]

남북 언론 교류 현황과 중재기구 필요성 27

- 신석호 (동아일보 디지털뉴스팀장 · 북한학 박사)

제2부 종합토론 45

사 회 | 정은령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팩트체크센터장 ·
서울제4중재부 중재위원)

토론자 |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왕선택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김중배 (연합뉴스 통일언론연구소 연구원)

지승우 (통일부 교류협력국 사회문화교류과장)

■ 제 1 주 제

북한언론이론의 이해와 남북 언론보도의 실태

김 영 주

(경남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명예교수)

북한언론이론의 이해와 남북 언론보도의 실태

김영주 (경남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명예교수)

I. 서론 : 김여정의 선전선동부 장악과 북한언론 관행의 변화

북한의 수령 김정은(국무위원장)의 등장과 그의 여동생 김여정이 선전선동 활동에 관여하면서 북한언론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백두혈통’으로 2017년 10월 7일에 열린 제7기 제2차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 된 김여정은 선전선동부 부부장(김기남 선전비서 / 리제일 제1부부장)에서 제1부부장(박광호 선전선동부장)으로 승진하면서 북한언론에 변화의 바람이 본격적으로 불기 시작했다. 예컨대, **보도적 기능**에서 중시하는 **사실성과 신속성**(예컨대, 양강도 수해, 평양의 주택건설 붕괴, 김정은의 다리 저는 모습 등)이 강화되었다. 또한, 북한정권 수립 70주년(2015년) 8월 15일을 맞이하여 로동신문, 민주조선, 청년전위, 평양신문 등 이른바 ‘북한의 4대 신문’에 **컬러화**를 단행하는 한편, 체육전문매체인<체육텔레비죤방송>(토, 일요일 19~22시)도 설립했다.

미국의 언론학자인 윌버 슈람(W. Schramm)에 따르면, “공산주의 국가 체제는 ‘**힘(power)**’과 ‘**설득(persuasion)**’이라는 양쪽의 수레바퀴에 의해 굴러간다”고 지적하였다. 이것은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이 군사력과 경찰력을 기반으로 하는 ‘강제’(총대)와 더불어, 언론기관을 주축으로 하는 ‘설득과 동의’ (붓대)를 통해 그들의 체제를 유지한다는 의미이다. <광명백과사전7>(2011, 552)에 따르면, 북한당국은 ‘주체의 출판보도사상’과 ‘붓대중시사상’을 나란히 병렬하면서, “혁명은 사상의 힘으로 전진하며, 사상의 위력은 붓대에 의해 담보된다. 인민대중을 사상적으로 각성시키고 영웅적 투쟁으로 고무추동하기 위해선 붓대를 중시하고 그 역할을 높여야 한다”며 **붓대중시사상**을 새롭게 부각시키고 있다.

북한은 그들의 헌법에서 ‘**사회주의(공산주의) 국가**’임을 표방하고 있지만, **전체주의 국가적** 요소가 많은 나라다. 이뿐만 아니라, ① 유교적 가족국가 (봉건적 왕조국가), ②

병영국가(군대국가; 유격대국가), ③ 종교국가, ④ 극장국가의 특성도 함께 지니고 있어 그들의 실체를 명확하게 파악하기는 용이하지 않다. 북한당국은 북한식 사회주의나 수령의 위대성을 선전할 필요성이 있으면 선전책자를 국내·외에 수십만 부씩 살포하는가 하면, 특정한 주제와 관련되는 자료(문건)는 수십 년 동안 일체 유출시키지 않는다. 이러한 북한의 폐쇄성, 돌출성, 의외성 때문에 정확한 파악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와 함께, 1960년대 초반 김일성의 지시로 시작되어 김정일이 고수했던 ‘공정적 모범을 통한 감화교양’(‘부정·비판을 통한 교양’보다 ‘**공정감화교양**<공정을 통한 감화교양>이 조선의 근로인민에게 알맞고 효율적인 교양방법이다)이 정책수행상 문제가 있는 경우 언론매체를 통해 **신속하고 공개적으로 비판**(예컨대, 평양근교의 자라양식장 및 식목 현지도)하는 정책으로 전환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환언하면, 지금까지의 북한당국이 조직활동의 일환으로 전개했던 생활총화, 비공개회의 및 김일성·김정일의 저작집 등에서만 이루어졌던 **비판활동**을 인민대중들에게 대중매체를 통해 공개하는 전략으로 바꾸겠다는 것을 뜻한다.

이 글의 목적은 김정일의 등장과 함께 출판된 <광명백과사전7>(2011)의 내용(북한의 교육, 어학, **출판보도** 등을 언급)을 통해 북한언론이론의 변화를 감지하고, 북한매체의 대남보도의 특징을 파악하는 한편, 남한의 언론매체에서 취급하는 북한보도의 문제점을 이론적 차원에서 고찰해 보는데 있다.

II. 본론 : 김정은 시대 북한언론이론의 변화

1. 북한언론의 기능론과 일반원칙, 기본성격과 언론활동의 근본원칙

해방 직후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 북한언론의 기능론은 ① 레닌의 언론기능론(집단적 선전자·선동자·조직자)을 고수하다가 1960년대 초반부터 김일성이 선전선동자적 기능과 조직동원자적 기능에다가 ‘**문화교양자적 기능**’을 새롭게 첨가하였다(② 김일성의 언론기능론). 1974년 <5·7문헌>을 통해 ③ 김정일의 주체적 출판보도사상이 완성되었다. 이것은 조직동원자(경제조직자)적 기능과 문화교양자적 기능은 그대로 가져오고 ‘선전선동자 기능’을 대내적·대남적·대외적 차원(대내적 차원의 선전선동자적 기능을

‘사상교양자적 기능’, 대남적 차원에서 ‘대적투쟁과 대적언론전의 강력한 무기로서의 기능’, 대외적 차원에서 ‘대외선전과 외교수단으로서의 기능’)으로 나누어 5가지로 정리한 것이다(김영주·이범수, 1999, 92~96).

한편, **주체적 출판보도사상(주체언론철학)**이 37년 동안 지속되었으나, 2011년 12월 김정일이 사망하고 김정은이 들어서자 ‘문화교양자적 기능’을 삭제하고 그 대신 ‘**보도적 기능**’을 출판보도물의 가장 기본적인 본성적 기능이라며 전면에 내세우는 새로운 언론 이론(④ 김정은의 언론기능론; **보도적 기능, 사상교양자적 기능, 조직동원자적 기능, 대외선전적 및 외교적 기능, 대적언론전의 기능**)을 제시하였다(<광명백과사전7>, 2011, 558~562). 이것은 북한당국이 ‘정론성’(해설·처방기능; 상관조정기능)도 중요하지만 ‘보도성’(환경감시기능; 정보전달기능)을 우선적으로 담보하지 않고서는 정론성의 효력도 높일 수 없다는 자각에서 나온 것처럼 보인다. **북한당국은** 보도적 기능을 중시한다고 하면서 “부르주아 출판보도물은 인간의 생물학적 본능(예컨대 애착, 물욕, 성욕 등)을 자극하는 **흥미성 위주**로 가지만, 그들의 당적 출판 보도물은 인민들의 올바른 생활과 투쟁을 이끄는 데 도움(예컨대, 수령의 혁명활동, 현지도와 대외활동, 근로자들에 대한 감사 및 로작발표, 수령에 대한 흠모자료 등)이 되는 **유익성 위주**로 간다”고 주장하였다.

북한에선 신문, 잡지, 방송, 통신 등을 통해 실현되는 언론활동을 ‘사회정치활동’으로 규정하고 철저하게 ‘**계급성(당성)**’을 띤다고 전제하였다. 따라서, 언론매체는 ‘특정한 계급이나 당, 사회적 집단의 사상과 이익을 대변하는 사상적 무기로 복무한다’고 인식하면서, 근로인민에게 복무하는 당적 언론(혁명적·진보적 언론)과 착취계급에게 복무하는 반동적 언론(반인민적·보수적 언론)으로 양분된다고 보았다. 북한의 언론학자들은 북한언론을 전자로 간주하고, 남한언론을 후자로 간주한다. 따라서, 북한은 남한언론의 주요가치인 ‘**무당성**’(초계급성; 불편부당성)과 한 짝을 이루는 ‘**객관성**’을 ‘**부르주아적 객관주의**’라고 폄하하고, 자신들의 언론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로동신문 사설을 통해 북한언론의 본질과 성격을 살펴보면, 원론적 차원에서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라 조금씩 수정되었다. ‘당의 예리하고 전투적인 사상적 무기’나 ‘당과 대중을 연결하는 중요한 수단’, ‘당의 믿음직한 방조자’, ‘당과 인민의 대변자’, ‘당정책의 옹호자·실천자’라는 개념들은 이미 1960년대에 형성되었으며

지금까지 변함없이 내려오고 있다. 1970년대에 들어와서 ‘계급투쟁의 예리한 무기’, ‘선진사상의 옹호자·전파자’, ‘사회여론의 대변자·조직자’라는 개념이 덧붙여졌으며, 1980년대는 ‘사회개조·인간개조하는 전위기수’, ‘대중의 친근한 교양자’라는 개념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1990년대는 ‘대외선전·대적투쟁의 무기’, ‘김정일의 사상과 영도를 구현하기 위한 혁명적 무기’ 등이 추가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와 ‘당의 노선과 정책의 옹호자·선전자’, ‘당의 목소리와 입장을 대변하는 사상적 무기’ 등으로 정리되었다.

‘주체언론’으로 요약되는 **북한언론의 성격**은 김정일의 5·7문헌(<우리 당의 출판보도물은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에 이바지하는 위력한 사상적 무기이다>, 『김정일선집 4』, 1974. 5. 7)에서 처음 제기한 ‘주체적 출판보도사상’ (주체의 출판보도사상리론)의 핵심내용으로서, ‘새형의 주체의 출판보도물’과 ‘김일성주의 혁명적 출판보도물’ 등 2가지다(김영주, 1998, 445). 전자는 철두철미하게 주체사상으로 관통되어 있으며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생명으로 삼고 있음을 뜻하며, 후자는 위대한 김일성주의를 지도적 지침으로 삼고 있으며 김일성주의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을 뜻한다. 1974년부터 2010년까지 이 2가지를 일관성 있게 ‘주체언론의 성격’으로 고수하다가, 2011년에 나온 <광명백과사전7>(555)에선 ‘**새형의 주체의 혁명적 출판보도물**’ 하나로 통합했다. 이것은 ‘북한의 출판보도물이 김일성·김정일이 개척하고 발전시킨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는 것을** 자기의 숭고한 목적으로 삼고 있다’는 의미이다.

김정일은 1974년에 발표한 <5·7문헌>에서 북한언론의 임무·사명을 3가지로 정리하였다. 그것은 ① 모든 성원들을 참다운 김일성주의자로 만들고(사회성원들을 당과 수령에 끝없이 충실한 주체형의 혁명가로 교양개조하고), ② 사회를 김일성주의의 요구대로 개조하여 공산주의의 물질적 요새를 점령하는데 기여하며(경제·문화·사회의 모든 분야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철저히 개조하여 사회주의의 물질적 요새를 점령하는데 이바지하며), ③ 조국통일과 남조선혁명, 세계혁명의 승리를 이룩해 나가는데 적극적으로 이바지(조국통일과 세계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데 있다(김영주·이범수, 1998, 55~58; <광명백과사전7>, 556~557)고 보았다.

정치·사상적 차원에서 사상교양자적 기능을 통해 ‘참다운 김일성주의자’나 ‘충직한 주체형의 혁명가’로 만드는데 기여하고 둘째, 경제적 차원에서 조직동원자적 기능을 통해 ‘공산주의의 물질적 요새를 점령’하거나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는데 기여하며

셋째, 정세적 차원에서 대적투쟁·대외선전의 무기로서의 기능을 통해 ‘조국통일과 남조선혁명 및 세계혁명의 승리’를 이룩하는데 기여하는 것이 북한언론의 임무와 사명이라 규정하였다. 여기서 언급된 ‘김일성주의자’(이른바 ‘주체형의 혁명가’)는 주체사상을 유일한 세계관으로 삼는 사람이며, 수령의 권위를 절대화하고 수령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신조화하며 당의 방침을 집행할 때 ‘무조건성의 원칙’을 고수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북한언론의 일반원칙은 레닌에 의해 주창된 개념을 약간 수정한 것이며 보도활동의 근본원칙은 김정일에 의해 처음 주창되었다. 북한은 레닌(『What is to be done?』, 1902; <Where is to begin?>, 『Iskra』 (4호), 1901. 5)이 주창한 당적 원칙과 대중적 원칙, 진실적 원칙 등을 참고하여 ① 공산주의적 당성과 노동계급성(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강조하고 노동계급의 근본이익을 옹호, 관철함), ② 인민성과 대중성(인민대중의 이해관계와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 출판보도활동에서 광범한 대중을 적극 참가시킴), ③ 진실성과 전투성(공산주의적 객관성으로서 근로인민대중들의 계급적 입장을 반영하며, 계급적 원수들과 타협하지 않고 그들의 비리를 예리하게 폭로함) 등을 제시하고 있다(조형창 외, 1982, 11). 이 일반원칙 3가지는 북한당국이 <광명백과사전> (555~556)이 나오기 전까지 중요시하며 언급하였지만, 확실한 이유는 알 길이 없지만 진실성·전투성을 슬그머니 제외하고 있다.

출판보도활동의 근본원칙에 대한 내용은 김정일의 <5·7문헌>에서 처음으로 제시되었다. 그것은 ① 주체의 원칙(언론활동을 조선혁명의 이익과 인민의 요구와 지향, 북조선의 실정에 맞게 독자적인 신념과 판단에 기초하여 풀어나감), ② 당의 유일적 지도 원칙(모든 언론인들이 당 중앙의 유일적 지도 밑에 한 사람 같이 움직여야 하며 원칙적이고 중요한 문제들을 오직 당 중앙의 결론에 의해서만 풀어나가며 당 중앙에서 일단 결론이 난 문제는 무조건 철저히 집행하는 기풍을 세워야 함), ③ 종자를 바로 쥐고 속도전을 힘있게 벌리는 원칙(기사나 편집물의 사상적 알맹이를 틀어잡고 전격적으로 밀고 나가 최단 기간 내에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최상의 성과를 이룩함) 등 3가지였다(김영주·이범수, 1998, 60~62).

<광명백과사전>(562~563)에선 ① 당의 유일적 지도원칙, ② 주체의 원칙, ③ 인민성의 원칙(군중의 심리와 사상감정에 맞게 쓰며 인민들이 흥미를 가지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통속적·생활적으로 씀), ④ 창조적 원칙(경직된 사고와 관점, 구태의연한 일본새를 버리고 편집물들을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참신하고 생동하게, 창조적으로 만

들) 등 4가지로 수정했다. 전자 3가지가 모두 사상성(당, 주체사상, 종자 등)과 관련된 것이라면, 후자는 사상성에 **인민성과 창조성**을 첨가한 것이다.

북한은 언론인[출판보도인]을 ‘**사상전선의 전초선에 서있는 당의 붉은 문필전사**’로 규정하였다. 1960년대 로동신문 사설에서 언론인의 성격을 위와 더불어 ‘대중을 조직동원하는 적극적인 정치활동가’, ‘당정책의 적극적인 옹호자·선전자·관찰자’로 규정하다가 1970년대에는 ‘주체적 출판보도사상’에 입각하여 ‘수령께 충직한 문필전사’, ‘당과 수령을 정치사상적·이론적으로 옹호·보위하는 친위대·근위대’와 ‘김일성주의 정수분자’ 등을 새롭게 추가하였다(『로동신문』, ‘65. 11. 2.; ‘71. 11. 1.자).

1980년대에 이르러 ‘정치사상적·기술실무적으로 준비된 주체형의 혁명적 문필가’, ‘정치적 식견과 안목, 풍부한 지식과 문필기량을 소유한 정치활동가’, ‘당과 수령만을 믿고 싸워나가는 강毅한 혁명투사’라는 개념을 추가하였으며, 1990년대에 ‘당과 운명을 같이하는 영원한 붓과 마이크’, ‘선동나팔수’, ‘당의 영원한 동행자·충실한 방조자·훌륭한 조언자’, 2000년대 이후에는 ‘선군의 붓대로 혁명의 수뇌부를 제일선에서 옹호하는 주체형의 문필가’, ‘당의 충실한 대변자’, ‘**당사상전선의 전초병**’ 등으로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로동신문』, ‘80. 11. 1.; ‘90. 11. 1.자; <광명백과사전>, 2011, 573)(<표1> 참조).

2. 북한언론매체의 기사 속성과 내용

북한에서 기사는 ‘기자들이 신문과 통신, 잡지들에 써 내보내는 글’(<광명백과사전>, 2011) 또는 ‘출판보도물에 실리는 보도적이며 정론적인 글’(『조선대백과사전(1)』, 1996)로 개념을 규정하였다. 북한의 신문학 개론서 역시 ‘신문, 방송, 통신 등의 출판보도물에 실을 것을 목적으로 하여 주로 기자들이 쓴 모든 글’(『신문기사론』, 1979, 9) 또는 ‘기자를 비롯하여 노동통신원 및 열성필자들이 보도선전을 위하여 쓴 글’(『신문학개론』, 1989, 92)로 개념을 규정하였다.

북한언론매체의 기사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정론성과 보도성을 비롯하여 호소성과 전투성, 시사성과 통속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이 가운데 ‘정론성’과 ‘보도성’은 출판보도물의 생명선이다(리응필, 1979, 10~12; <광명백과사전>, 2011, 564). 보도성은 ‘새로운 소식을 신속, 정확하게 그리고 광범한 대중 속에 널리 알리는 속성’(리응필, 1979,

12) ‘사회정치적으로 의의 있는 새로운 소식을 민감하게 포착하여 광범한 사람들에게 신속, 정확하게 알려주는 기사의 기본속성’(엄기영, 1989, 9)을 의미한다. 보도성은 여러 가지 하위개념을 가지고 있다. 『신문기사론』(리응필, 1979, 12~13)에서는 ‘사실성’, ‘시사성’, ‘신속성’, ‘광범성’을 열거하였으며, 『신문학개론』(엄기영, 1989, 9)에서는 ‘소식성’, ‘시사성’, ‘신속정확성’을, <광명백과사전7>(565)에선 시간성, 계기성, 시기성, 시사성 등을 열거하였다. 한편, 부르주아 출판보도물에선 보도지상주의를 고창하면서 이른바 ‘보도경쟁’을 일삼는 나머지 심지어 거짓보도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북한의 출판보도물에선 철두철미 보도의 신속성과 함께 정확성, 진실성, 과학성, 친절성을 보장함으로써 주체적 출판보도물로서 갖추어야 할 보도성을 최상의 높이에서 구현한다고 강변하였다(<광명백과사전7>, 565).

정론성은 기사의 가장 본질적이고 고유한 속성으로서 ‘사회정치적으로 간절한 문제에 대한 명백한 주장과 견해를 내세우는 속성’(리응필, 1979, 10)이다. 이 정론성은 모든 문제를 정치적으로 예리하게 분석, 판단하는데서 표현된다. 즉, 모든 문제에 대한 ‘정치적 분석과 일반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여기서 말하는 ‘정치적 분석과 일반화’는 ‘객관적 현실의 사건과 사실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하여 측면별로 분류하여 당적 입장에서 고찰한데 기초하여 그가 속한 전체적 입장에서 공통적인 정치적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이다.

북한의 출판보도물 가운데 신문은 고유한 성질인 보도성과 정론성을 기본속성으로 하고 그것을 가장 강하게 체현하며, 잡지는 주로 선전과 연구에 복무하기 때문에 보도성과 정론성의 구현에선 제한된다. 방송은 사상문화 교양수단으로서 보도성·정론성과 함께 사상성, 예술성, 문화성을 종합적으로 체현하며 통신은 보도 전문적인 매체로서 보도성을 강하게 체현하는 반면에 정론성은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 구현한다. 따라서, 보도와 교양, 론평의 위력한 수단으로서 보도성과 정론성을 가장 질게 체현하는 신문이야말로 출판보도물의 중추를 이룬다고 천명한 것이다(<광명백과사전7>, 577).

북한 언론학자들은 언론매체가 ① 정치사상 교양자료(정치사상선전), ② 경제교양자료(경제선전), ③ 문화교양자료(사회문화선전), ④ 정세교양자료(정세선전) 등 4가지를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조형창·리준하, 1982, 37~54; <광명백과사전7>, 2011. 578~579). 이것은 북한언론의 내용이 언론의 구체적 기능인 ① 사상교양자적 기능, ② 조직동원자적 기능, ③ 문화교양자적 기능, ④ 대적투쟁 및 대외선전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언론매체의 내용과 언론매체의 기능은 1:1로 서로 대응하고 있다.

북한의 다양한 언론기능들을 수행하도록 편집된 언론매체의 기본내용들은 북한의 대표적 신문인 로동신문의 지면에 잘 반영되어 있다. 총 6면 가운데 신문의 성격과 당 일호 신문의 편집중심을 집중적으로 표현하는 1면에는 정치관련 보도를 주로 실는다. 정치면인 1면에는 김일성 부자의 혁명활동과 관련된 공식보도와 주요문헌들이 편집되며 당의 방침해설과 대중을 조직동원하는 사설과 전투적 구호, 그 날의 중요보도들을 실는다. 1면(정치면) 다음으로 중요한 2면은 정치적 성격의 자료를 취급하는 정치교양면이다. 따라서 로동신문의 1면과 2면은 정치사상 교양자료를 주로 실어서 사상교양자적 기능(정치사상선전)을 주로 담당하며, 3대혁명 가운데 사상혁명을 고양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3면은 경제면으로서 호소성과 선동성이 강하게 부각되도록 편집하고, 4면은 공산주의교양과 행사보도를 주로 취급하는 문화면(공산주의교양면)이다. 따라서, 로동신문의 3면과 4면은 경제 및 문화 교양자료를 실어 각각 조직 동원자적 기능(경제선전)과 문화 교양자적 기능(사회문화선전)을 담당하며,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고양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5면과 6면은 각각 남한정세면과 국제정세면으로서, 정세교양자료(정세선전)를 많이 취급하여 주장이 강하게 드러나며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세력들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도록 호소성과 선동성을 강화하여 편집한다. 따라서 로동신문의 5면과 6면은 정세교양자료를 실어서 대적투쟁 및 대외선전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며 사상혁명을 고양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엄기영, 1989, 106~107).

북한언론매체에는 남한언론매체들이 즐겨 취급하는 사건·사고기사(사회면 기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업이미지를 제고하는 '기업광고'나 소비자에게 구매심리를 자극하는 '상품광고'가 없는 것이 커다란 특징이다. 이에 따라 북한언론사 조직에는 남한에서 중시하는 '사회부'나 '광고국'이 없다. 그러나, 선전·선동을 중시하는 북한 언론매체에는 남한과는 달리 당력사교양부, 당 생활부, 사회주의교양부 등이 있다.

북한언론이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을 이룩하는데 기존사회의 부정적인 면을 집중 부각시키는 사건·사고기사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했다. 반면, 긍정적 모

범을 통한 감화교양이 북한 실정에는 어울린다고 생각하여 공정감화기사를 개발하고 있다. 한편, 상품광고와 기업광고는 원칙적으로 취급하지 않지만, 평양신문 4면에 가끔 특정 백화점에 새로 입하된 상품이나 일용품을 소개하는 광고가 게재되거나 극장(영화관 포함)의 프로그램 안내를 싣는 경우가 있다. 북한에선 제품소개광고의 경우 '경제교양자료'의 하나로 취급하고, 극장(영화관) 안내광고의 경우 '문화교양자료'의 하나로 취급하고 있다. 최근 평양역 광장에 마련한 옥외광고탑에 <평화자동차 기업광고>를 실시하여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탈리아 피아트 자동차 부품을 들여와 조립(승용차 뼈꾸기, 봉고차 휘파람)하는 평화자동차는 통일교와 북한당국이 합자해서 만든 자동차 조립공장으로 평양과 가까운 남포에 있다.

북한의 언론학자들은 정치사상 교양자료를 필두로 하여 경제·문화·정세 교양자료 등 4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는데 이바지하는 '정치사상 교양자료'는 가장 중요시하는 내용이다. 이 교양자료는 ① 당과 수령의 혁명활동 보도자료(김일성 부자의 고전적 노작·당문헌관련 보도자료, 당·국가 사업지도관련 보도자료, 대외활동 보도자료), ② 당원·근로자대상 사상교양자료(김일성의 혁명사상·당노선·혁명전통에 대한 사상교양자료), ③ 당 건설·활동 보도자료, ④ 일반정치 보도자료 및 국내외 정치행사 보도자료 등 크게 4가지로 구성된다.

두 번째는 '경제교양자료'로서 ① 당의 경제정책 해설·선전 보도자료, ② 경제건설투쟁 성과와 경험을 일반화하는 보도자료, ③ 과학기술 선전자료 등 크게 3가지로 구성된다(김영주·이범수, 1999, 158~160). 세 번째는 '문화교양 자료'로서 ① 사회주의 문화건설노선·방침관련 해설·선전자료, ② 문화건설 분야의 성과·경험관련 선전자료, ③ 근로자들의 일반상식·문학예술적 소양 제고자료 등 3가지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정세교양자료'로서 ① 남한정세자료, ② 국제정세자료 등 2가지로 구성된다. 우선 '남한정세자료'는 ① 남한의 김일성부자 및 조선노동당에 대한 혐모자료, ② 주체사상 학습자료, ③ 통일투쟁자료, ④ 반미·민주화·생존권을 위한 투쟁자료, ⑤ 미일제국주의자들의 만행폭로자료, ⑥ 해외동포들의 반미·반한 투쟁자료, ⑦ 민주화 운동자료 등을 다양하게 취급한다.

'국제정세자료'는 ① 세계인민들의 김일성부자에 대한 혐모자료, ② 투쟁성과 소개자료, ③ 국제공산주의운동 투쟁자료, ④ 신흥국가·발전도상국가의 새생활 투쟁자료,

⑤ 자본주의국가의 노동운동자료, ⑥ 제국주의국가의 음모·죄행 폭로자료 등을 다양하게 취급한다(김영주·이범수, 1999, 167~170).

한편, 북한당국이 2000월 6월 개최된 남북한 정상회담 직후 얼마동안 로동신문(남조선 정세면)과 평양방송, DMZ확성기방송(2004년 남북한 동시 철거) 등에서 남한에 대해 실시하였던 비방·비난·모략 선전활동을 자제하였다. 남한을 자극하는 악평어(예컨대, 괴뢰통치배, 미제앞잡이, 파쇼군사독재 등) 대신 대통령, 국군 등 남한의 공식적인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사실보도 위주로 전환한 바 있었다.

최근의 로동신문(2018. 9. 15.; 9. 25.; 10. 28.; 10. 30.; 10. 31.; 11. 7.자)을 살펴보면, 기존의 관행에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작년부터 현재까지 로동신문 제호의 오른쪽 슬로건이 “당의 령도 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하자!”라는 **경제슬로건**이었다. 이전에는 **정치·사상** 관련 슬로건이 주류였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로동신문의 **1면**은 정치·사상면이었지만, 요즈음 6~7건의 경제관련 소식으로 도배를 하거나 3건 이상의 경제소식을 꾸준히 올렸다. 경제면이었던 **3면**은 관행대로 경제소식을 실어 경제면이 사실상 크게 늘어난 것이다. 남한정세면이었던 **5면**은 남한소식을 거의 실지 않는 대신, 과학·기술·교육·의료·산림 등의 분야에서 일어나는 긍정감화교양자료, 계급교양자료, 혁명전통교양자료 등을 실어 ‘공산주의교양면’인 4면의 연장으로 여겨졌다. 국제정세면인 **6면**에는 국제소식과 더불어 2~3건의 남한소식(민노총의 시위, 자유한국당 비판, 5·18 당시 계엄군 성폭행 폭로, 남측 민화협 방북소식 등)을 **비교적 단신**(논평, 논설, 단평 등의 의견기사에서 보도기사 형태로 전환)으로 처리하여 남한소식을 대폭 줄였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런 현상들이 굳어질 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3. 대남언론보도(남한정세자료)의 구체적 내용

로동신문의 대남보도 논조를 깊이 있게 분석하기 위해선 위에서 상술한 내용 가운데 특히, 남한정세자료에 대한 북한당국의 인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북한당국은 ‘남한정세자료를 잘 취급하는 것은 북한신문의 기본임무로부터 언제나 중요한 임무로 나선다’고 전제하면서, **김일성 교시**(“남조선 정세를 연구하여 그것을 군중에게 널리 알려주는 것은 비단 남조선 근로대중을 정치적으로 교양, 계몽하는데 목적이 있을 뿐만 아

나라 북반부 인민들에게 우리 혁명의 기본과업을 철저히 인식시키며 그들의 혁명적 경각성과 계급적 의식을 높이는데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김일성저작집』 제10권, 303)까지 인용하고 있다. 그들은 이러한 인식과 함께 사회주의혁명에 대한 국제적 연대성을 강화하고 세계여론을 그들 쪽으로 유리하게 전변시킬 수 있는 중요한 담보가 된다고 인식하였다.

남한정세자료의 중요성에 대한 북한당국의 인식은 김일성종합대학 신문학과에서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신문학 개론』(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9)의 내용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김영주·이범수, 1999, 163~167). 남한정세 자료의 취급은 우선적으로 남한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적극 이바지해야 할 그들 신문들 앞에 나서는 기본 임무로부터 제기되는 혁명과업이다. 따라서 북한신문은 남한혁명과 조국통일에 대한 조선로동당의 전략전술적 방침들을 적극 해설, 선전하며 남한인민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각성시키기 위한 자료들을 잘 취급하는 것과 함께 남한정세자료들을 제때에 반영하는 것을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북한신문들이 **선차적**으로 관심을 돌려야 하는 것은 이른바 ‘위대한 수령(김정일 포함)과 조선로동당에 대한 남한인민들의 흠모자료,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선군사상 포함)을 적극 따라 배우고 그 기치 밑에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해 적극적으로 싸워나가고 있는 투쟁자료들’이라고 천명했다. 북한은 이런 형태의 기사를 **‘당과 수령에 대한 위대성 선전’**을 목적으로 하는 **‘충실성 교양자료’**라고 칭한다.

북한의 언론학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존함은 오늘날 남한인민들 속에서 인민대중을 묶어세우는 단결과 투쟁의 기치로 되고 있으며 수령님과 우리 당의 영도적 권위는 거대한 견인력과 감화력, 추동력을 지니고 있는 까닭에 김일성 동지를 민족의 태양으로, 통일의 구성으로 높이 우러러 모시고 따르며 우리 당을 민족의 향도성으로 끝없이 흠모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신문에서는 남한혁명가들과 각계각층 인민들이 주체사상(선군사상 포함)을 따라 배우며 김일성 부자와 조선로동당의 혁명역사와 혁명업적, 영도의 현명성과 고매한 덕성에 대해 감복하면서 끝없이 흠모하는 자료들을 소개, 선전하는데 응당한 힘을 넣고 있다는 것이다(김영주·이범수, 1999, 164).

두 번째 남한정세자료의 중요한 내용은 남한인민들의 반미자주화, 반파쇼민주화, 생존의 권리를 위한 의로운 투쟁에 대한 자료들이다. 북한 언론학자들은 “정세발전에서

주동적 역할을 하는 것은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하는 인민대중, 정의와 진리의 편에 서있는 혁명역량이다. 그런 까닭에 혁명역량의 장성강화와 그들의 투쟁소식을 시의성 있게 기동적으로 소개, 선전 하는 것은 그들의 투쟁을 고무하며 북반부 인민들을 교양하는데도 큰 작용을 한다”고 인식하였다.

세 번째로 중요한 내용은 남한에서 미일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이 감행하고 있는 범죄적인 책동과 야수적 만행을 폭로하는 자료(미일제국주의 만행폭로자료)들이다. 남한정세와 관련한 보도에서 기본은 미제침략자들의 ‘두 개 조선’ 조작책동과 새로운 전쟁도발 책동에 대해 폭로, 단죄하는 것이다. 그것은 미제가 남한에 군림하는 실제적 통치자이며 남한혁명의 첫째가는 투쟁대상이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북한신문은 남한정세 자료를 취급함에 있어 공격의 화살을 미제침략자들에게 집중하게 된다. 그리하여 남한의 식민지군사 파쇼통치의 장본인인 미제가 교활하고 악랄한 신식민주의 수법으로 식민지통치를 계속 부지해가며 우리 민족분열의 영구화를 꾀하며 조선에서 또다시 전쟁의 불집을 일으키려고 집요하게 책동하고 있는데 대한 자료, 미제가 백여 년 전부터 조선을 침략해 온 범죄적인 역사와 결부하여 그들이 오늘 남한에서 감행하고 있는 야수적 만행자료 등을 구체적 사실적 자료들에 기초하여 취급함으로써 미제침략군을 남한에서 몰아내는 것이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보장하는데서 초점으로 된다는 것을 똑똑히 인식할 수 있게 한다.

남한정세보도에서 미제와 함께 일본군국주의자들의 교활한 재침략책동 자료(미일제국주의 재침략책동자료)들을 잘 취급하는 것도 북한신문의 반영내용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그것은 일본군국주의가 미제의 손아래 동맹자로서 대동아공영권의 옛 꿈을 실현할 시대착오적 망상 아래 또 다시 남한에 침략의 검은 마수를 뻗치고 있으며 남한 괴뢰도당을 적극 부추겨주고 있는 사정과 관련된다. 그러므로 북한신문은 미제를 등에 업고 남한에 재침의 마수를 뻗치고 있는 일본군국주의의 범죄적 음모책동, 침략과 약탈 행위를 결음마다 폭로함으로써 북한인민들을 각성시키는데 이바지한다.

북한신문의 정세보도자료 취급에서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미국과 일본의 이중주구인 남한 괴뢰도당의 매국배족적이며 반인민적인 죄행과 음모책동을 철저히 폭로하는 자료들이다. 남한 괴뢰도당의 반동적·반인민적 죄행과 매국배족적인 음모책동자료들에 대한 취급은 북한인민들로 하여금 남한 괴뢰정권이 미제의 남한강점과 식민지정책을 가

리며 침략정책을 집행하는 위장물에 지나지 않으며 매국정권, 예측정권, 지주·매판자본가·반동관료배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반인민적 정권이라는 것을 철저히 발가벗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책동에 경각성을 높이며 외세를 몰아내고 남한의 괴뢰파쇼 통치배들을 소멸시켜야만 남한사회의 민주화와 나라의 통일위업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데서 큰 의의를 가진다. 북한 신문은 미제와 일본군국주의, 남한 괴뢰도당의 죄행과 음모책동을 폭로, 단죄함에 있어 시의적절하게 사실적으로 폭로하는 자료와 원리적으로 폭로하는 자료를 배합하여 취급하는 방향을 취한다.

마지막으로 남한정세와 관련된 보도에서 북한의 구체적 실정으로부터 출발하여 특수하게 해외동포들의 반미·반한 투쟁자료, 반파쇼민주화운동자료 등도 취급한다. 그것은 해외동포들의 투쟁이 남한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한 전체 조선인민의 투쟁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남한 정세자료는 조국통일부(구명칭: 남조선부)와 논설원실에서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광명백과사전7>(579)에서는 앞에서 5가지로 열거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4가지로 정리하였다. 즉, “① 위대한 김일성 부자를 높이 우러러 흠모하며 선군의 기치높이 강성대국을 건설하고 있는 북한을 동경하는 남조선인민들의 민심을 적극 소개 선전하며 ② ‘우리민족끼리’의 이념 아래 조국통일을 앞당겨나가기 위한 남조선인민들과 해외동포들의 투쟁소식을 널리 보도 선전한다. ③ 남조선 각계각층 인민들의 반미자주화, 사회민주화를 위한 투쟁자료를 싣고 ④ 남조선의 우익보수세력, 친미친일 사대주의자들과 반통일세력의 책동을 폭로 단죄한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김영주가 이명박 정권 시기(2008. 2~2010. 1) 로동신문의 대남 보도를 분석한 논문(104~105)에 따르면, 조국통일실천촉구자료(19.9%)를 필두로 당·수령흠모자료(15%), 미일재침략책동자료(14.9%), 생존권리투쟁자료(13%), 반미자주화투쟁자료(10.7%), 반파쇼민주화투쟁자료(9%), 반통일인사 비판자료(7.6%), 남측반인민죄행폭로자료(6.6%), 재난비리보도자료(3%), 일반인교류협력자료(0.3%)의 순이었다. 시기별로 구분하면, 제1기(정권인수기; 2008. 1. 1~1. 30)에 통일문제와 군사문제, 제2기(대통령취임초기; 2. 25~3. 25)에는 군사문제와 친북흠모, 제3기(촛불시위기; 7. 13~8. 11)에 파업·시위소식과 외교문제, 제4기(북한미사일 발사·핵실험기; 2009. 4. 29~5. 28)에 정치문제와 통일문제, 제5기(남북정상회담 추진기; 2010. 1. 1~1. 30)에는 통일문제와 파업·시위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었다. 북한식 표현으로 기술하면 제1기에는 조국통일실천촉구자료와 당·수령흠모자료, 제2기에는 미일재침략책동자료와 당·수령흠모자료, 제3기에는 생존권리투쟁자료와 당·수령흠모자료, 제4기에는 반통일인사비판자료와 조국통일실천촉구자료, 제5기에는 조국통일실천촉구자료와 당·수령흠모자료를 비중 있게 취급하였다. 긍정적 묘사는 당·수령흠모자료(4.81), 중립적 묘사는 조국통일실천촉구자료(2.68), 나머지는 부정적 묘사가 주류를 이루었다.

그 당시 로동신문에서 비중 있게 취급한 인물/단체는 이명박 대통령·청와대·국무총리 등을 필두로 남측겨레, 남한당국, 통일운동단체, 언론인, 진보시민단체 등의 순이었다. 제1기에는 한민족/남북겨레, 남측겨레, 통일운동단체 등을, 제2기에는 통일운동단체, 남측겨레, 군인/군부를, 제3기에는 이명박 대통령·청와대, 통일운동단체를, 제4기에도 이명박 대통령 등과 통일운동단체를, 제5기에는 이명박 대통령을 일체 거론하지 않은 채, 특별히 거론되지 않던 진보시민단체와 남한당국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취급대상 인물/단체에 대한 묘사에서 부정적 묘사(5점 척도)가 가장 높은 시기는 제3기(2.29)이며, 제5기(2.41), 제4기(2.49), 제2기(2.80), 제1기(3.43)의 순이었다. 제5기에는 이명박 정부나 대통령 개인에 대한 원색적 비난은 자제하는 편이었지만 개괄적 차원에서 여타의 등장인물이나 단체에 대한 부정적 묘사는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다.

‘악평어’(bad label)를 가장 다양한 형태로 붙이고 있는 기사형태는 ‘조국통일실천촉구자료’였다. 조국통일문제는 로동신문에서 가장 핵심적·중점적으로 취급하는 문제로서 남한의 집권세력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악평어를 양산해 왔다. 가장 주요한 단어(key word)는 ‘호전’, ‘분열’, ‘반통일’, ‘친미’, ‘파쇼’, ‘괴뢰’, ‘반역’ 등이다. 이와 함께 현직 대통령의 실명에 다양한 악평어(예컨대, 역도, 패당, 일당, 역적도당, 역적패당, 보수패당, 괴뢰정권, 매국역적 등)를 붙여 사용하기도 했다.

다음으로 다양한 악평어를 사용하는 것은 반미자주화투쟁자료였는데, 주요 단어(key word)는 ‘친미·사대·매국’, ‘강점’, ‘미제’, ‘호전’ 등이었다. ‘반미’라는 관점에서 미일재침략책동자료에도 유사한 악평어를 사용하였는데, 주요 단어로는 ‘미제’, ‘침략군’, ‘호전’, ‘제국주의’ 등이 있었다. 민생권리투쟁자료에는 주로 시위진압경찰이나 수사검찰 등公安당국에 대한 비판적 용어가 즐겨 사용되고 있었는데, 주요 단어는 ‘파쇼’, ‘괴뢰’ 등이었다. 제3, 4기에 집중적으로 사용되다가 제5기에 이르러 크게 자제하는 분위기였다(김영주, 2010, 115~117).

Ⅲ. 북한관련 보도의 문제점

북한보도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은 '80년대 말 세계사적 변화조류와 이에 따른 한반도 정세의 유동화에 능동적·주체적 대응'이 긴요해지던 **1989년 11월**, 한국기자협회가 <분단극복을 위한 언론의 역할 세미나>를 열고 '북한관련 보도의 문제점'(전택원 ; 중앙일보 외신부 차장)을 지적한 것으로 보아 그 연원이 무려 30여 년 되었다. 여기서 그는 "1989년을 기점(1988년 12월 <서울신문>에서 처음 실시하였고 다음해부터 본격적으로 설치됨 / 1990년 소련 붕괴, 동서독 통일)으로 일부 언론사에서 '북한부(통일부, 민족국제부 등)'를 별도부서로 설치하였지만, 1~2명의 전담기자로는 북한보도의 내용을 충실 하게 유지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남북 간 기자 교류의 시급함과 함께 북한전문기자의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1991년 12월**, 남북한 간에 남북기본합의서가 발효되자 한국언론연구원(연구자: 김정탁 성균관대 교수, 안춘옥 KBS 방송연구원 연구위원, 정용준 서울대 박사과정)에서는 <남북통일과 언론>('통일문제 보도에 대한 남북한 언론의 역할과 과제'를 모색)이라는 보고서를 펴냈다. 안춘옥(1991, 221~224)은 보고서에서 남북한 간 통일지향적 보도를 위해 ① 남북한언론보도 공동 위원회의 설치, ② 언론인의 교류 및 상주특파원을 통한 자유로운 취재활동 보장, ③ 국가보안법의 개정, <북한 및 공산권 국가에 대한 보도요강>의 철폐와 북한 형법의 폐지 등을 제안하였다.

한편, 김대중 정부가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던 **2000년 봄**에 이르자 한국언론재단과 한국방송진흥원이 중심이 되어 '남북화해시대 남북언론보도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고찰한 바 있으며, 올해 들어 문재인 정부가 제2차, 제3차 정상회담을 진행하자 예외 없이 관련학회나 언론인들은 비슷한 주제의 발표를 하기 시작했다.

김영옥·김택환(2000, 47)은 남북문제 보도의 체계적 접근을 위해 미디어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저널리즘 행위주체(언론인), 행위전략(보도 관행), 행위목표(언론사), 행위규범(사회·정치 권력)으로 나누고 각 차원별로 보도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지금도 설명력이 있는 이 분석을 하나의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표 2> 참조).

〈표 2〉 미디어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별 남북문제 보도의 문제점

구조적 원인	차원	구성요소	남북보도의 문제점
① 저널리즘 행위주체 (언론인)		◦ 직업에 대한 자기이해 ◦ 직업의 동기 ◦ 세계관 ◦ 전문지식 ◦ 내재화된 규범	◦ 북한에 대한 부정적 태도 ◦ 기자의식 결여 ◦ 윤리의식 결여 ◦ 체제 우월감 ◦ 전문성 결여
② 저널리즘 행위전략 (보도관행)		◦ 뉴스가치 ◦ 취재방법 ◦ 정보원과의 관계 ◦ 기사작성방법	◦ 경쟁적 보도 ◦ 선정주의 ◦ 냉전적 흑백논리 ◦ 부정확한 보도태도 ◦ 정보원의 신뢰도 결여
③ 저널리즘 행위목표 (언론사)		◦ 경제적 요구 ◦ 권력적 요구 ◦ 조직적 요구	◦ 상업주의 ◦ 안보상업주의 ◦ 북한문제에 무관심 ◦ 북한전문부서 결여 ◦ 북한에 대한 부정적 태도 ◦ 반공주의(냉전적 사고)
④ 저널리즘 행위규범 (사회·정치 권력)		◦ 법규 및 제도 ◦ 정치문화 ◦ 사회적 가치(이데올로기)	◦ 국가보안법을 통한 언론통제 ◦ 국가안보 명목의 언론통제 ◦ 북한관련 정보의 정부독점 ◦ 반공주의·냉전적 흑백논리 ◦ 통일비용론, 조기통일론
결과	가치	보도내용의 문제점	
① 저널리즘의 객관성		◦ 감상적·감정적 보도 ◦ 지엽적 사안에 대한 가십성보도 ◦ 핵심내용 간과 ◦ 오보(때로는 허보<가짜뉴스>) ◦ 왜곡·확대 보도 ◦ 미확인보도	
② 중요성(가치)		◦ 전문성 결여로 인한 부정확한 보도 ◦ 남북 간 긴장을 조장하는 보도 ◦ 북한의 부정적 측면 강조 ◦ 지배이데올로기의 확대 재생산	

여기서 연구자들은 남북문제 보도의 개선을 위해선 남북문제에 대한 다양한 입장과 의견에 대한 논의가 자유롭게 진행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성숙해야 되며, 자유로운 정보교류를 막고 있는 법규와 제도를 현실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작금의 채용시스템과 인사시스템으로 북한전문기자 양성이 어렵겠지만, 언론사 산하에 있는 북한·통일연구소 구성원들과의 연계를 통한 ‘전문화’도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2018년 5월 26일,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열린 ‘2018년 한국언론정보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김창룡 교수(인제대학교 신문방송학과)는 **북한보도의 오보유형**을 몇 가지로 정리해 발표했다. 첫째, 국정원의 발표를 일방적으로 받아 오보가 되는 유형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5년 국정원은 국회 정보 위원회 비공개 현안보고에서 인민군 서열 2위인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고사충으로 처형당했다고 밝히자 언론이 대대적으로 받아썼다. 보도 다음날 그는 조선중앙TV에 모습을 드러냈고, 심각한 오보를 낸 언론들은 하나같이 정정·사과 보도 등을 일체 하지 않았다.

둘째, 소문을 근거로 추측성 보도를 내놓고 특종 내지 단독이라 쓰는 보도형태이다. 대표사례는 1986년 11월 16일 조선일보가 1면 4단 기사를 통해 ‘김일성 주석 사망설’을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주말의 동경 급전…본지 세계적 특종”이라는 보도까지 내보냈다. 낙종했다는 낭패감에 빠진 여타 언론사들은 휴간일인 11월 17일 호외를 통해 ‘열차에서 총 맞았다’, ‘폭탄에 당했다’, ‘쿠데타’ 등 미확인 보도들을 쏟아냈다. 며칠 뒤 평양의 순안공항에서 몽고 주석을 맞이하는 김 주석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해프닝은 끝났다. 이 외에도 조선일보의 ‘성혜림 망명설’, ‘현송월 단장 처형설’, 2014년 9월경 김정은 위원장이 40일 가량 모습을 보이지 않자 모 언론사의 ‘평양 계엄령 선포설’, ‘정신병설’, ‘김여정 대리통치설’ 등의 오보를 다양하게 냈다.

셋째, 일부 외신(러시아, 일본, 미국 등)을 인용함으로써 오보가 된 사례도 있다. 지난 1994년 2월 15일 경향신문은 “북한이 이미 핵폭탄을 제조했으며 아프리카에서 실험까지 마쳤다”며 러시아 안보전략연구소 고문 블라디미르 쿠마초프의 발언을 전한 일본 지지통신과 프랑스의 AFP 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하지만 그는 “단지 러시아 언론과 일본 언론에 보도된 사실 등을 보고 개인적인 의견을 낸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넷째, 연합뉴스가 북한 오보의 진원지가 된 사례도 있다. 지난 2013년 4월 4일 연합

은 “북, 개성공단 입주기업협회에 ‘10일까지 전원 철수’ 통보”라는 기사를 냈고, 대부분 언론들이 연합뉴스를 받아 보도했다. 하지만 사실은 북한이 개성공단 입주기업협회에 10일까지 통행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 같은 북한 보도 오보가 발생한 이유로 △일부 탈북자와 소식통이 하는 말을 그대로 기사화하기 때문 △오보가 나와도 북한에서 항의를 하거나 소송을 당하지 않기 때문 △자극적인 보도로 페이지뷰를 올리려고 인터넷 뉴스 속보팀들이 마구잡이로 받아쓰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보도의 오보 공통점으로 “북한을 악마화, 범인화, 범죄집단화 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북한을 미화나 옹호할 필요도 없지만 언론이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조차 하지 않는다는 사실, 결국 국내 언론이 북한에 관한한 공정한 보도, 진실한 보도에 얼마나 무책임했던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보다 앞선 2015년(광복 70주년) 8월 10일, 남한의 언론인들과 언론학자들은 서울 소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 모여 <남북관계 보도 이대로 좋을까-KBS와 조선일보 보도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북한관련 보도의 문제점을 점검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당시 이용마 MBC 해직기자가 지난 2015년 5월부터 7월까지 최근 조선일보의 북한보도 128건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대부분이 출처나 근거를 알 수 없는 익명의 북한 소식통을 인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유령기사’와 함께 탈북자나 재중 북한인들의 증언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기사의 신뢰성이 극히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IV. 결론 : 남북한 언론 보도관행의 극복 가능성

남한언론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나 사건을 뉴스중심으로 보도하는 객관적·사실 보도적 저널리즘(보도성 중시)을 지향한다면, 북한언론은 조선로동당의 노선이나 정책을 의견중심으로 논평·해설하는 설득적·주의주장적 저널리즘(정론성 중시)을 지향한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그들의 언론을 한마디로 ‘예리하고 전투적인 사상적 무기’로 규정하고 있다.

남한언론이 기사의 질을 결정하는 속성으로 정확성, 공정성, 객관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북한언론은 정론성, 혁명성, 호소성, 통속성(대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정확성과 객관성이 특정한 당이나 계급에 기울어지지 않는 불편부당성

(무당성, 초당성, 초계급성)을 기본바탕으로 삼고 있다면, 정론성과 혁명성은 노동자·농민 계급의 편에 서서 당과 계급적 입장을 예리하게 천명하는 당성(계급성)을 기본바탕으로 삼고 있다.

남북한은 기사형태를 보도적인 기사(보도기사), 사논설(해설·처방 기사), 연문기사(피처기사) 등 3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기사의 사전적 개념정의는 남북한이 비슷하지만, 기사의 기능과 역할, 형태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드러냈다. 남한언론의 기사들이 '주요한 정보제공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면, 북한언론은 김일성 부자의 덕성과 영도력을 선전하고 북한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는 데 이바지하는 '위력한 사상적 무기'로 기능한다. 따라서, 남한언론은 스트레이트성 보도기사가 다양하게 발전하였다면, 북한언론은 사논설류의 일종인 정론과 논평, 연문기사인 덕성기사나 영도기사, 긍정교양기사 등이 다양하게 발전하였다.

남한언론인이 객관적 사실을 신속하게 알려주는 '정보전달자'나 정부기관의 권력남용과 비리를 감시하는 '정부감시자'(과수견), 정부시책에 대한 '건설적 비판자'라고 한다면, 북한언론인은 사상전선의 전초선에 서있는 '당의 붉은 문필전사', 당정책의 적극적인 '옹호자·선전자·관철자'(보호견), 당과 수령을 정치사상적·이론적으로 옹호보위하는 '친위대·근위대'이다.

북한에서는 1970년대 중반에 이르러 레닌 및 김일성의 3대 언론기능론을 5대 언론기능론 즉 ① 사상교양자적 기능(대내적 선전선동활동), ② 문화교양자적 기능(대내적 문화활동), ③ 조직동원자적 기능(대내적 조직활동), ④ 대적투쟁·대적 언론전의 무기로서의 기능(대남적 선전선동활동), ⑤ 대외선전과 외교수단으로서의 기능(대외적 선전선동활동) 등으로 확대하였다. 이러한 북한언론의 기능론은 자본주의 사회의 언론기능론(① 환경감시기능, ② 사회조정기능, ③ 문화전수기능, ④ 오락기능, ⑤ 광고기능)을 가지고 있는 남한 언론과 매우 다르다. 이러한 남북한의 기능론 차이는 언론내용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물론, 최근에 들어 북한당국은 '보도적 기능'의 중요성을 인식, 그네들의 언론기능론을 약간 수정(보도적 기능, 사상교양자적 기능, 조직동원자적 기능, 대외 선전적 및 외교적 기능, 대적 언론전의 기능)한 바 있지만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아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북한 언론은 매우 큰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미국의 언론학자인 허버트 알철(1991, 371~391)은 다르게 주장하고 있다.

그는 그의 저서 『The Agent of Power』(국문번역; 강상현·윤영철, 『지배권력과 제도 언론』)에서, “자본주의·사회주의·제3세계 체제 하의 모든 언론들은 결국 지배 권력에 장악되어 있는 까닭에 그들의 **계급이익을 확대 재생산하는데 기여하는 이념적 도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어떤 체제 하의 언론이라도 그 기능과 역할이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단언하였다. 이처럼 남북한 언론을 미시적 관점에 아니라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두 언론 역시 ‘**통치계급의 이익을 확대 재생산하는 이념적 도구**’라는 기능을 똑같이 수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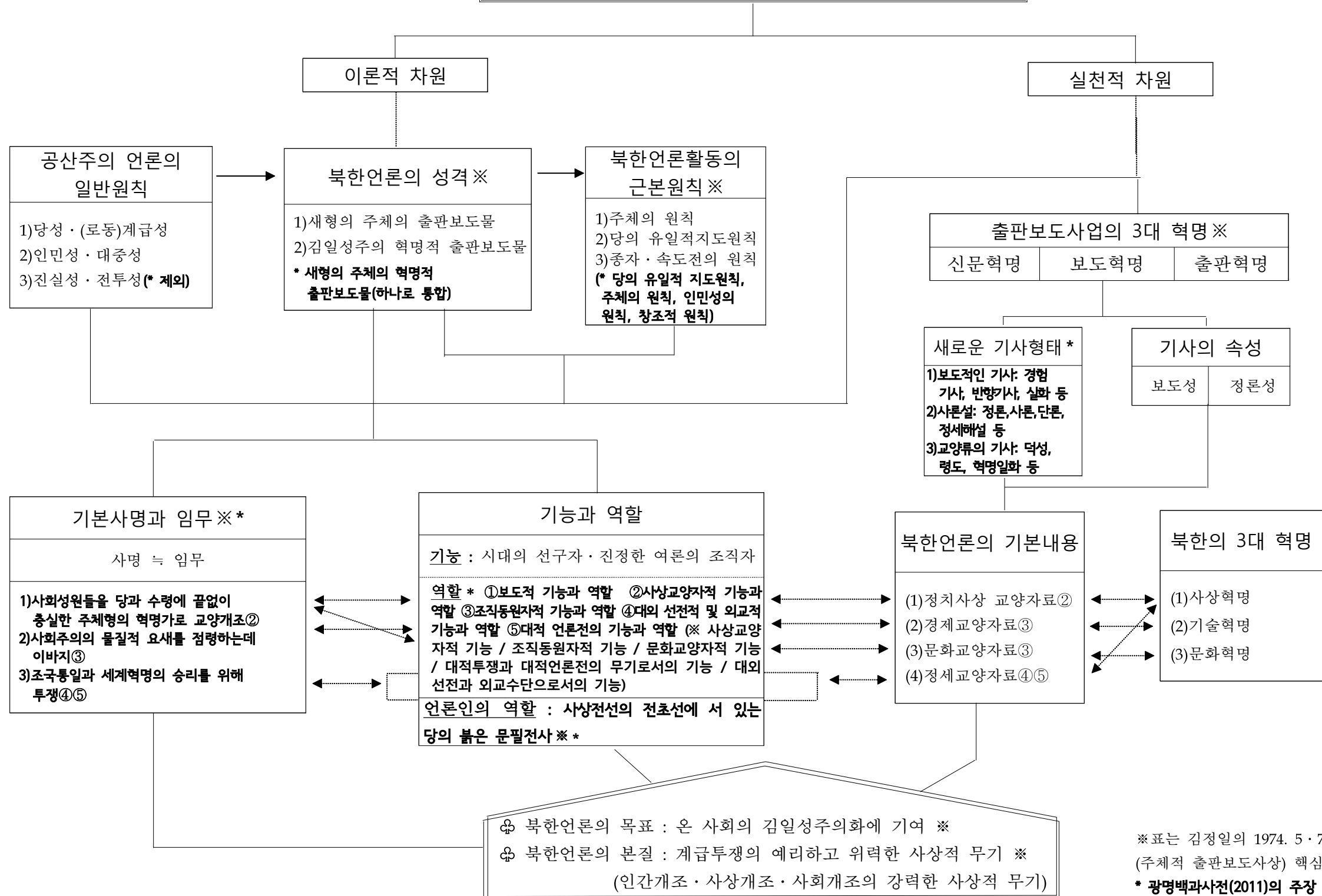
이용마 기자는 2015년 북한에 대한 공식 취재 루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자 개인이 북한을 자유롭게 취재 할 수 있는 사회적·법적 여건도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그나마 북한보도 관행의 현실성 있는 극복방안으로 ‘전문기자제도’의 도입과 ‘북한보도준칙’의 이행을 제시하였다. 이 보도준칙은 전국 언론노동조합연맹,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등의 언론단체들이 광복 50주년(1995년)에 공동으로 <평화통일과 남북화해·협력을 위한 보도·제작 준칙>(총강: ① 우리는 대한민국(약칭 한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약칭 조선)으로 나뉘어진 남과 북의 현실을 인정하며, 상호존중과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상대방의 국명과 호칭을 있는 그대로 사용한다. ② 우리는 냉전시대에 형성된 선입견과 편견에서 벗어나 객관적으로 보도·제작함으로써 남북 사이의 공감대를 넓혀 나간다. ③ 우리는 남북관계 보도·제작에서 언론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가로막는 법적·제도적 장애를 타파한다. ④ 우리는 남과 북의 우수한 민족문화 유산을 공유하고 민족의 공동번영을 추구할 수 있는 기사 및 프로그램 개발에 힘쓴다. ⑤ 우리는 통일문제에 관한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공정하게 반영하여 민주적인 여론형성에 기여한다. **보도실천요강**: ① 남북 긴장해소 노력, ② 인물 호칭·직책 존중, ③ 관급자료 보도 유의, ④ 내외통신 인용 책임, ⑤ 외신보도 신중 인용, ⑥ 1차 자료 적극 활용, ⑦ 각종 추측보도 지양, ⑧ 사진·화면 사용 절제, ⑨ 회화적인 소재 지양, ⑩ 망명자의 증언 취사. **제작실천요강**: ① 정보제공 적극 편성, ② 통일지향 가치 추구, ③ 냉전시대 관행 탈피 ④ 상업·선정주의의 경계, ⑤ 다원주의 가치 반영, ⑥ 보도활용 제작 신중, ⑦ 생활문화 적극 소개, ⑧ 능동적인 자료 접근, ⑨ 남북 차이 이해 노력, ⑩ 남북 동질성의 부각)이라는 이름으로 마련한 것이었다.

이 준칙은 1988년 9월 문공부가 마련한 <북한 및 공산권 국가에 대한 보도요강>(북한에 대한 보도기준: ㉞ **언론기관이 자율적으로 보도하지 않아야 할 사항**: ① 북한 및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거나 정부의 대북한정책에 역행하는 여론을 조성하는 사항, ② 남북한 정부 및 민간인사의 정치적·외교적인 비공식 접촉·교섭 및 교류 등 미공개사항, ③ 비밀로 분류된 북한관계자료, 통신·전자·사진정보 및 공작첩보 사항, ④ 기타 북한관련 보도내용이 국민의 안보의식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등 국익과 안보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㉟ **문공부와 사전협의 후 보도할 수 있는 사항**: ① 남북한 관계에서 북한공산주의체제의 우월성을 인식시킬 우려가 있는 사항, ② 언론기관이 북한의 선전 등 특수

목적을 위해 제작·공포된 사항인지 또는 국익과 안보에 저해되는지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 ③ 남북한 간의 동족동질성 회복에 저해되는 사항, ④ 북한 등 반국가단체에서 발행한 자료와 국민의 대북인식을 오도케 할 우려가 있는 **외국간행물 또는 외신**, ⑤ **정부당국이 제공한 이외의** 김일성, 김정일의 정사진 및 동사진 보도에 관한 사항. 이 요강을 준수하지 아니한 언론기관이나 종사자에 대해 정부가 행정적 제재를 가하는 동시에 국가보안법, 형법 등 현행법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과는 차원이 전혀 달랐다. 이 준칙에 이어 KBS가 1998년 <북한관련 보도 기본원칙>을, 2000년에는 남북정상 회담을 앞두고 <남북정상회담 보도준칙>을, MBC 역시 2008년에 7장으로 구성된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하지만, ‘남측언론이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민족화합과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미래지향적 내용을 담고 있던 보도준칙들은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잘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물론, 북한을 객관성 있게 취재하려는 남측 언론인들이 이러한 준칙들을 어쩔사리 준수한다면 하더라도, ‘자유로운 통일논의 및 남북한 간 화해노력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국가보안법>(고무추동죄, 회합·통신죄, 금품수수죄, 잠입·탈출죄, 편의제공죄 등)의 존재와 함께 북한에 대한 정확하고 풍부한 정보의 태부족, 국정원을 비롯한 정부기관의 북한정보 독점, 보수적 언론인들의 냉전적 시각 등이 해결되지 않는 한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는 당분간 어렵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 표 1 > 북한언론의 이론과 실천과의 연계도



참고문헌

- 김영옥·김택환(2000). 『남북문제 보도의 새로운 모색-독일사례가 주는 시사점과 함께』. 한국언론재단.
- 김영옥·황용석(2000). 『남북화해시대의 국민적 과제와 언론의 역할-전문가 심층설문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재단.
- 김영주(1998). 『현대북한 언론연구』. 마산 : 경남대학교출판부.
- 김영주(2010. 12). <로동신문>에 나타난 대남보도 논조분석 - 2008년 이후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제10권 4호). 한국지역언론학회.
- 김영주·이범수편(1991). 『북한언론의 이론과 실천』. 서울 : 나남출판.
- 김영주·이범수편(1994). 『김정일시대의 언론이론과 정책』. 서울 : 한울아카데미.
- 김영주·이범수편(1999). 『현대북한 언론의 이해』. 서울 : 한울아카데미.
- 김일성(1968). 천리마시대에 맞는 문학예술을 창조하자 - 작가, 작곡가, 영화부문 일군들과 한 담화. 1960. 11월 27일. 『김일성저작선집2』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궁정감화교양 주장)
- 김일성(1982). 출판사업과 학생교양사업을 강화할 데 대하여 - 출판보도일군 및 민청일군들과 한 담화. 1962년 5월 3일. 『김일성저작집16』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정일(1992). 당대표자회 결정관철에서 출판보도물의 역할을 높이자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 및 기자, 편집원들과 한 담화. 1966년 10월 28일. 『김정일선집1』.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조선대백과사전6> 표제어로 등재. 출판보도부문에서 새로운 '혁명적 전환을 일으키는 강령적 문헌')
- 김정일(1994).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당사상사업의 당면한 몇 가지 과업에 대하여 - 전국당선전일군강습회에서 한 결론. 1974년 2월 19일. 『김정일선집4』.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정일(1994). 사설혁명을 일으킬 데 대하여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74년 2월 22일. 『김정일선집4』.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정일(1994). 우리 당 출판보도물은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에 이바지하는 위력한 사상적 무기이다 - 조선기자동맹 중앙위원회 제3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1974년 5월 7일. 『김정일선집4』.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이른바 5·7문헌)**
- 김정탁·안춘옥·정용준(1991). 『남북통일과 언론』. 서울 : 한국언론연구원.

- 리응필(1979). 『신문기사론』. 평양 :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 배순재 · 라두림(1967). 『신문리론』. 동경 : 재일본조선언론출판인협회.
- 알철, 허버트(1991). 강상현 · 윤영철역. 『지배권력과 제도언론』. 서울 : 나남.
- 엄기영(1989). 『신문학개론』. 평양 :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 이기현(2002). 『남북화해시대의 방송저널리즘』. 서울 : 한국방송진흥원.
- 조형창 · 리준하(1982). 『신문학』. 평양 :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 조형창 외(1984). 『기사집필수업(1)』. 평양 :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 『백과전서(1)~(6)』 (1982~1984). 평양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조선대백과사전(1)~(32)』 (1995~2001). 평양 : 백과사전출판사.
- 『광명백과사전(7)』 (2011). 평양 : 백과사전출판사.
- 『출판보도사업에 대한 당의 방침해설』 (1985).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 『로동신문』 '65. 11. 2.; '71. 11. 1.; '74. 7. 16.; '76. 12. 1.; '80. 11. 1.;
 '85. 11. 1.; '86. 12. 1.; '90. 11. 1.; '93. 11. 20.; '95. 11. 1.; 2000. 12. 1.;
 2018. 9. 15.; 9. 25.; 10. 28.; 10. 30.; 10. 31.; 11. 7.자.

■ 제 2 주 제

남북 언론 교류 현황과 중재기구 필요성

신 석 호

(동아일보 디지털뉴스팀장 · 북한학 박사)

남북 언론 교류 현황과 중재기구 필요성

신석호 (동아일보 디지털뉴스팀장 · 북한학 박사)

I. 들어가며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남북 언론 교류 협력에 대한 기대와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12월까지 계속된 북한의 핵·미사일 전략도발 국면에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은 물론 논의조차 불가능했다. 하지만 올해 1월 1일 신년사를 시작으로 김정은 북한 노동당 국무위원장이 전향적인 대외 평화공세로 나오면서 남북 언론 교류가 실현되기 시작했으며, 이의 확대를 위한 정부당국과 언론계 차원의 논의가 여러 차례 공론화되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7월 19일 프레스센터에서 ‘정부-언론단체 조찬간담회’를 열고 정부와 언론단체들의 공론장을 마련했다. 통일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관계당국과 한국기자협회 언론노조 신문협회 등 언론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남북 언론 교류 현황과 미래에 대해 토론했다.¹⁾ 재단은 8월 16일에도 프레스센터에서 ‘남북 언론 교류 무엇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주최했다.²⁾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지는 등 남북관계 개선이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언론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제안도 이어졌다. 임동원 한반도 평화포럼 공동이사장은 9월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원로자문단과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남과 북의 통신사가 서로의 건물에서 상주하며 활동을 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³⁾ 앞서 6·15남측위원회 언론본부는 6월 20일 평양에서 열린 ‘6·15민족공동위원회 남북해외위원장회의’에 참석해 ‘남북언론중재기구(가칭)’의 설립을 제안했다. ‘남북 언론 교류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이라는 제안서를 통해 “오보 방지, 반론보도 등 남북 언론의 불신을 제거하고, 상호 신뢰성 및 사실보도 그리고 평화와 번영을 위한 미래 지향적 보도를 강화하고자 한다”며 별도의 발족 추진 제안문까지 공개했다.⁴⁾

1) 인천신문 인터넷판(2018. 7. 23).

2) 한국기자협회보 인터넷판(2018. 8. 22).

3) 연합뉴스 인터넷판(2018. 9. 14).

4) 변상욱 (2018), 남북 신뢰 제고를 위한 공동 언론중재기구 구축의 필요성, <언론중재>, 148호.

이 발표문은 위와 같은 사회적 공론화의 연장선에서 ‘남북 언론 교류 현황과 중재 기구 필요성’을 주제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① 남북 언론 교류 현황, ② 활발한 남북 언론 교류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에 대한 논의, ③ 남북 간 오보의 해결방안으로서의 중재 기구 설립에 대한 논의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2018년 11월 말 현재, 정부와 언론단체의 논의 차원을 떠나서 개별 언론사들의 구체적인 남북 언론 교류 사례가 축적되었다. 본 발표문은 이에 대한 실증적인 조사와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현장 전문가 인터뷰 조사기법을 사용했다. 2018년 11월 현재 남북 언론 교류를 위한 상설조직을 따로 설치하고 있거나 공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언론사인 KBS, MBC, SBS, JTBC와 연합뉴스에 11월 8일 아래와 같은 질문지를 보냈다.

1. 2018년 귀사가 이뤄낸 남북 방송 교류 성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프로젝트별로 보도내용, 방북 기간과 인력 등)
2. 2019년에는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3. 북한의 비핵화 진전을 전제로 남북방송교류가 어떤 수순으로 발전되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 남북 방송 교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들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5. 남북 간에도 언론중재제도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에 대해 11월 16일까지 김현경 MBC 통일방송추진단 국장, 이우탁 연합뉴스 통일 언론연구소 부소장, 표인구 SBS 남북교류협력단장이 실명으로 답변을 보내왔다. KBS에서는 한 관계자가 익명을 전제로 ‘개인 의견’을 보내왔다. 아래에서는 이들의 답변을 중심으로 위에서 제기한 질문에 대답하기로 한다.

II. 2018년 남북 언론 교류의 성과

답변을 종합한 결과, 2018년 11월 16일 현재 조사 대상 언론사들의 남북 언론 교류는 연초보다 크게 활성화된 상태였다.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났는데, 첫째는 대북제재라는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해 비용이 들지 않는 방향으로 다른 단체의 협력사업에 편승해 평양 현지를 취재하거나 남한에 내려온 북측 인사들의 활동을 보도하는 형태였다. 아직 언론사 차원의 독자적인 방북 취재 등은 실현되지 않고 있었다. 둘째는 미국 시민권

자나 영주권자 등 방북이 자유로운 제3국인을 통해 북한 현지를 취재한 후 남측에서 후속작업을 진행해 방송하는 방식이었다. 각 사별 사례를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

1. MBC 사례

가장 많은 실행 사례를 구체적으로 보내온 곳은 MBC였다. 주요 사례 별로 답변 내용을 정리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표 1 > 2018년 MBC의 남북 언론 교류 주요 내용

1. 평창올림픽 기념 남북 태권도 선수단 MBC 상암홀 특별 시범공연	
행사 내용	◦ 한국 주도 세계태권도연맹(WT)과 북한 주도 국제태권도연맹(ITF) 협연 ◦ 2월 14일 MBC 상암홀에서 합동 공연
보도 내용	◦ '원 코리아 평화 태권도' 공연 실황 녹화 중계방송 ◦ 통일전망대에서 태권도 특집 프로그램 방영 (북측 태권도 선수단 동정 등 현장 아이템 포함) ◦ 뉴스 데스크 방송
보도 의미	2018 남한 방송사상 최초의 남북 교류 성과
2. 남측 예술단 평양 공연 주관 중계사로 방북 중계방송	
행사 내용	◦ 3월 31일~4월 3일 동평양대극장과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남측 예술단 공연
보도 내용	◦ 공연 녹화 및 남측 방송사에 제공 ◦ 방북인력 15명(PD 및 중계기술인력)
보도 의미	◦ 북측 조선중앙TV 및 지원인력과 협력
3. 아리스포츠컵 유소년 축구대회 평양 대회 취재	
행사 내용	◦ 8월 10일~19일 평양 능라도 5·1경기장(선수단 등 151명 방북)
보도 내용	◦ 뉴스 데스크 등 데일리 뉴스와 통일전망대 방송 ◦ 3명 취재진 파견
보도 의미	◦ 북측에서 열린 스포츠교류행사 방북 취재
4. 세계태권도연맹(WT) - 국제태권도연맹(ITF) 평양 합동시범공연	
행사 내용	◦ 10월 30일~11월 3일 평양 태권도전당 등에서 열린 행사 주관방송사
보도 내용	◦ 뉴스 데스크 평양 현지 생방송 2회(양각도 호텔/ APTN평양지사 이용) ◦ 통일전망대 기획 보도 ◦ 방북 취재인력 10명
보도 의미	◦ 현지에서 제작한 뉴스 아이템을 인터넷으로 서울에 전송

5. MBC스페셜 / 옥류관 서울 1호점 3부작(7월)	
보도 내용	◦ 냉면을 통해 한반도 평화시대의 미래를 논하는 푸드멘터리
보도 의미	◦ 외국 다큐 감독을 북측에 파견, 옥류관 내부 영상을 취재해 활용
6. MBC스페셜 / 6개월 후 만납시다: 북한 결핵병원 이야기(9월)	
보도 내용	◦ 북한 결핵퇴치 운동단체인 유진벨(Eugene Bell)의 활동기
보도 의미	◦ 유진벨 및 석해인 감독에게서 비디오를 받아 남측에서 제작

2. 연합뉴스 사례

연합뉴스는 남북 언론 교류를 위한 준비상황과 SNS 채널을 통한 대국민 인식 확대 사업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해왔다.

“연합뉴스는 4월 통일언론연구소 설립추진단을 출범시켰고, 4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8월 연구소를 정식 발족시켰다. 연구소는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번영, 통일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조직이다. 연구소의 첫 과제는 ‘연합뉴스 평양지국’ 개설 작업이다. 회사의 역량을 보다 조직적으로 결집하기 위해 사내 기구로 ‘평양지국 개설 준비위원회’도 만들었다. 준비위는 5월 초순 중국 베이징에 있는 북측 공식 창구를 통해 조선중앙통신에 공식 제안서를 보낸데 이어 기회가 될 때마다 북측과의 언론 교류 사업을 추진할 뜻을 전했다. 이와 함께 정부 당국뿐 아니라 여당 등 정치권, 그리고 학계 주요 인사와의 교류와 소통을 통해 연합뉴스 평양지국 개설의 필요성과 시의성을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연구소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보다 쉽게 대중들로 하여금 연구소 활동과 취지를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중략). 북한 관련 뉴스는 ‘취재원’의 확인이 용이하지 않다는 특징으로 인해 그동안 무책임한 ‘카더라’ 보도가 횡행해왔다. 사실에 입각한 보도는 언론의 기본사명이며, 이는 북한 관련 보도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연구소는 이런 취지를 보다 대중 친화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뉴미디어 영역에 뛰어들었다. 통일언론연구소 유튜브 채널은 8월 1일 ‘정일용의 북맹타파’라는 대문명을 내걸고 출범했다. 이 채널의 주요 코너로는 ‘정일용의 북맹타파’와 함께 ‘평양이모, 서울조카’, ‘서유석의 통일아리랑’, ‘이우탁-김중배의 탁견중론’ 등이 있다.

국내·외 미디어 환경은 영상과 음성 콘텐츠 중심으로 급속도로 채편 중이며, 수용자의 눈높이에 맞춘 알기 쉽고 재미있는 콘텐츠,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콘텐츠가 대중으로부터 각광받고 있다. 갈수록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양한 북한 관련 소식과 외교 안보 이슈를 전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는 페이스북 페이지인 ‘연합, 서울 그리고 평양’을 공식적으로 개설, 북한 관련 뉴스와 칼럼, 보유 중인 북한 영상물 가공 등 다양한 콘텐츠들을 게재해왔다. 연구소는 한국언론학회와 공동으로 ‘통일시대에 대비한 남북 언론 교류 활성화 방안’ 공동토론회를 개최했으며, 향후에는 각 분야의 북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수송동 포럼’도 운영할 계획이다.”

연합뉴스는 특히 1991년 이후 자사의 남북 언론 교류 노력의 역사를 강조하면서 평양지국 개설 등에 대한 자사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연합뉴스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남북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민족의 동질성 회복에 이바지하는 뉴스정보 제작이라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 점은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돼 있다. 연합뉴스는 1991년 두 명의 기자를 평양주재원으로 내정 발령했으며, 이후 북측 조선 중앙통신과의 교류협력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1999년 북한과 옛 공산권 뉴스를 전문으로 다루던 내외통신을 인수·합병했으며, 북한 매체의 24시간 모니터링 보도 체제를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구축했다. 또 2002년부터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국·영문 기사와 사진을 실시간으로 받아 국내에 독점 배포하고 있다. 2006년 선양 특파원을 상주시키는 등 북한 관련한 뉴스 공급에서 국내외 최고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남북 당국 간 협조로 남북 통신사 간 교류가 성사될 경우 이를 수행할 만반의 준비와 역량을 갖추고 있다.”

〈표 2〉 연합뉴스 남북 언론 교류 추진경과

1991. 12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 계기로 남북 언론 교류 가능성에 대비해 연합뉴스 ‘평양 주재원’ (김갑생, 고한성 기자) 내정 발령
1999. 2	조선중앙통신과 교류를 목적으로 통일부로부터 북한주민접촉 승인 획득
1999. 2	김종철 사장, 김덕룡 당시 조선중앙통신사장에게 교류제의 서한 발송
2001. 8	민족공동행사에 참가한 정일용 논설위원, 김성국 조선기자동맹위원장에게 교류 제안서 전달

2002. 7	재일총련 산하 조선신보와 사진 교환 및 배포 계약 체결
2002. 12	재일총련 산하 조선통신과 조선중앙통신 기사 실시간 수신계약 체결
2004. 6	신기섭 국제·업무상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뉴스통신사기구(OANA) 총회서 김병호 조선중앙통신사 부사장 등과 만나 중앙통신 기사 직접 수신방안 등 논의
2005. 8	장영섭 사장, 8·15 참가 북측 대표단 통해 김기룡 사장에게 교류 촉구서한 전달
2007. 10	김기서 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 교도통신 대표단과 함께 방북해 고구려 고분벽화 사진전 개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조선중앙통신사장 등 면담
2013. 9	오재석 상무, 아시아태평양뉴스통신사기구(OANA) 총회 참석 중 조선중앙통신 림호룡 외사국장과 만나 양사 간 협력 강화 방안 논의
2017. 3	재일총련 계열 조선미디어와 노동신문 독점 사용계약 체결, 당일 신문 PDF파일 실시간으로 받아 제작 활용

※ 2007년 10월 당시 연합뉴스 사장이 평양을 방문해 조선중앙통신사와 면담하면서 제안했던 내용은 △상호 특파원 교류 △지국 개설 △연합뉴스-조선중앙통신사 간 기사 직접 교환 △인적 교류 확대 △연락 및 협의채널 구축 등이었음

3. KBS, SBS, JTBC 사례

KBS는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1차 정상회담과 9월 18~20일 평양에서 열린 3차 남북정상회담 과정을 생방송과 녹화 등의 형식으로 보도했다. 한 관계자는 “남북 언론 교류가 아닌 정부의 요청에 따른 국영방송사의 업무 수행”이라고 설명했다. KBS는 8월 평양에서 열린 유소년축구대회에는 MBC, SBS 등과 함께 보도에 참여했다. 모두 평양에서 뉴스를 제작해 서울로 송출하는 등 유사한 형태였다. KBS 방송문화연구소가 5월 30일 ‘남북교류와 통일시대’를 주제로 주최한 ‘공영방송발전포럼’에서 정윤식 강원대 교수는 ‘통일에 대비한 KBS의 준비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은 9개 사항을 주문했다.⁵⁾

5) <https://m.blog.naver.com/kbsbrin/221297375828>(11월 14일 오후 3시 검색)

1. 북한의 전파방송 분야의 현황에 관한 자료수집과 체계적인 관리
2. 인력의 훈련 및 준비: 효과적인 기술전수를 위한 계획 수립
3. 전파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통합 방법 준비
4. 전파방송 통신통합에 소요되는 비용추정 및 재원조달 방안 연구
5. 통일 이후의 전파방송 시장구도에 관한 연구
북한지역의 보편적 서비스 도입방안 연구
북한지역의 방송망과 통신망 고도화 방안 등
6. 전파방송 분야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학술 대회 주최
7. 남북 공동의 전파방송기술연구소(가칭)를 설립, 향후 교류 및 협력센터로 활성화
8. 전파방송 분야의 전문가나 기술자의 왕래 활성화 등
9. 통일 이후 방송국 운영 및 프로그램 제작 및 편성방향 숙의

SBS는 유소년들의 10여 년간 축구교류를 기록한 영상을 단독 입수해 추석특집 다큐멘터리 ‘소년, 경계를 넘다’를 제작해 방영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10월 강원 춘천 유소년 축구대회 참석차 방남한 북측 소년 소녀 선수단을 밀착 취재한 다큐멘터리 ‘경계를 넘다2, 소녀들의 가을’을 제작 중이다.

7월 9일부터 12일까지 언론 최초로 보도국장 등 8명의 대표단을 평양에 파견해 관심을 모았던 JTBC에서는 기한 내에 공식적인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 당시 통일부는 이들의 방북 신청 승인 사실을 발표하면서 대표단이 북측 민족화해협의회 및 방송 관계자들을 만나 남북 언론 교류 및 평양지국 개설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⁶⁾ 그러나 현재까지 JTBC의 평양지국 개설 문제 등이 진전되고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언론계에 따르면 당시 대표단은 북측 인사뿐만 아니라 현지에 주재하고 있는 외국 언론사 특파원들과의 간담회 등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JTBC가 추석 연휴를 앞둔 9월 23일과 24일 잇달아 방송된 ‘서울·평양, 두 도시 이야기’를 방송한 것은 방북이 자유로운 한국계 인사를 통한 영상 취재의 대표적인 사례다. 1부 방송 ‘서울 요리, 평양 요리’, 2부 방송 ‘한강과 대동강’으로 편성된 이 시리즈는, 평양 음식점 ‘옥류관’, 그리고 라이벌 ‘청류관’을 비롯한 다채로운 평양 음식을 찾아가는 미식기행 다큐멘터리다. 북측 현장 취재는 재미 언론인 진천규 기자(통일TV 대표)가 진행했고 그 영상을 서울 JTBC 본사가 넘겨받아 편집하는 형식을 활용했다.⁷⁾

6) 중앙일보 인터넷판(2018. 7. 6).

Ⅲ. 2019년 계획과 장기적 전망

북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 고위급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도 각 언론사들은 내년도 사업 구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북 제재에 따른 활동 제약과 사내 비밀을 모두 공개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를 고려해 답변 받은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표 3〉 2019년 언론사별 남북 언론 교류 계획

언론사	답변 요지
MBC	◦ 다큐, 뉴스, 예능 등 기회가 닿는 대로 협력사업을 강화할 예정
SBS	◦ 5월 강원 원산에서 열리는 유소년축구대회 참가 등
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과 '한반도의 생태계' '민족 문화유산 답사기' 등 공동취재 ◦ 조선중앙통신과 학술대회 공동주최도 추진

내년 초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한 장기 전망에 대해서는 보다 더 긍정적인 전망이 모아졌다. 사업의 방식은 지금과 같은 정부 및 민간사업 편승 형식이 아니라 언론사와 북측의 직접 교류 형식이 진행될 것이라는 데 의견이 많았다. 북한 현지 제작에서 나아가 남북 공동제작 형식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다양한 장르가 진행될 수 있으나 북한 체제의 특성을 고려해 자연 다큐나 경제실적 홍보 등 부담이 크지 않는 내용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연합뉴스는 독일의 사례에 비출 때 방송사보다 통신과 활자매체의 교류가 앞설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표 4〉 북한 비핵화 전제 남북 언론 교류 장기 전망

언론사	답변 요지
MBC	◦ 대북 제재 해제를 계기로 언론사의 독자적인 북한 현지 취재, 다큐, 예능, 공연, 스포츠, 더 나아가 드라마 등으로 확장될 것 ◦ 형식도 현지 제작에서 더해 공동제작으로 확장될 것으로 예상
SBS	◦ 북측과 언론사의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 사업이 진행될 것
연합뉴스	◦ 과거 독일 경험을 유추하면 방송교류는 통신과 신문(활자매체)에 비해 시기적으로 나중에 추진될 가능성이 큼

7) JTBC 인터넷판(2018. 9. 13).

IV. 제도적 장치: 남북언론중재기구의 필요성 검토

1. 제도적 뒷받침 가능성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남북 언론 교류가 활성화될 경우 뒷받침되어야 할 제도적인 장치에 대해 응답자들은 △취재의 자유 보장 △지국 설치 및 특파원 파견 촉진 및 보장 장치 △악의적 오보에 대한 구제장치를 들고 이를 위한 남북 당국 간 사회문화 교류 합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가운데 특히 상호 취재자유 보장은 모든 것에 우선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적 기반으로 보인다.

〈표 5〉 남북 언론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언론사	답변 요지
MBC	◦ 상대측의 자유 취재를 보장, 보호하는 조치 ◦ 언론사 지국 특파원 파견에 대한 당국간 촉진제도 및 보장 장치 ◦ 악의적 오보에 대한 반론권 및 구제장치
연합뉴스	◦ 평양이나 서울에 상주하거나 주재할 기자들의 신변안전 보장 ◦ 지국운영을 위한 세금면제(이중과세방지)협정 ◦ 교류와 관련된 당국 간 세부적인 합의 등

특히 연합뉴스는 “6자회담 참가국 가운데 평양에 상주지국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한국이 유일하다”며 국가기간통신사인 자사의 평양지국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평양에는 북한의 전통적 우방인 러시아 이타르 타스 통신과 중국의 신화통신이 오래전부터 상주해 활동했고, 지난 2006년 9월 서방 언론 가운데 처음으로 AP의 영상전문 매체인 APTN이 진출한 이래, 교도통신(2006년 9월), AP(2012년 1월), AFP(2016년 9월)가 속속 진출했다. 미국 보도전문채널 CNN도 비상주로 현지 취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며, 로이터 통신과 북한과 국교를 맺은 영국의 BBC 방송도 현지 특파원 상주를 다각도로 타진하고 있다.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의 핵심역할이 ‘정보주권’ 실현과 ‘민족 동질성 회복’이라는 점에서, 국제적으로도 한국을 대표해온 매체인 연합뉴스가 북한에 지국을 두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그러나 북한 매체들에게 모든 것을 개방할 수 있으며 이미 사실상 개방중인 한국에 비해, 북한은 체제의 특성으로 인해 그럴 수 없다는 것이 현재 남북 언론 교류 과정 속에 실존하는 비대칭성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이에 대한 논의만으로도 전혀 새로운 토론회 내용을 구성할 수 있을 것 같다.

아마도 오늘날의 정치적 지형에 따르면 두 가지 상반된 주장이 대립할 것이다. 남한이 허용하는 만큼 북한도 남측 언론에 취재의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이른바 ‘엄격한 상호주의’다. 이에 대해 북측의 체제 특성을 고려해 남측이 어느 정도 양보해야 한다는 ‘완화된 상호주의’ 또는 ‘비대칭적 상호주의’가 맞설 수 있다. 남북한 취재자유 의 상호주의 논쟁은 본 토론회의 핵심 쟁점인 중재기구 필요성의 가장 큰 전제조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통일이 되기 전 동서독의 언론 교류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다. 동독 언론인들은 서독에서 자유롭게 취재할 수 있었지만 서독 언론인들은 취재의 자유에 상당한 제약을 받았다는 것이다.

2. 남북언론중재기구의 조건

실제로 이번 발표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 남북 간에 언론중재기구가 필요한지에 대한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컸다.

‘악의적 오보에 대한 반론권 및 구제장치’를 필요한 제도적 장치로 꼽았던 김현경 MBC 국장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언론중재제도는 남측 언론의 책임감을 높이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북측의 후속조치 및 구제 가능성을 열어놓아 북측의 문호 개방, 활동을 확대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북한 현지 취재가 위축되는 주된 이유는 북측의 경직성 및 언론의 역할에 대한 남북 간 차이 때문이지만, 남측 언론의 적대적이고 무책임한 보도도 원인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이우탁 연합뉴스 부소장도 “(남북 간 언론중재기구 설치)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다. 북한 보도의 경우 취재원 확인이나 오보방지 방안이 없어 그동안 무리한 보도 등이 있어왔다. 하루빨리 초보적이거나 남북 간 언론보도 확인 창구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언론 교류 활성화 시 언론중재기구 공동설립도 좋은 방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KBS 관계자는 이에 따른 남한 언론들의 북한 보도 위축 가능성과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 관영 매체들의 발달 상태를 지적하며 “남한의 독자적 언론자유 기능 유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 북한체제의 언론 환경 속에서 언론중재는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 측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해당 언론사가 책임 있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 단계” 라고 지적했다. 표언구 SBS 단장도 “현 단계에서는 (남북한 언론 중재기구) 필요 없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 문제에 관하여는 지난 9월에 발간된 ‘언론중재’ 제148호(2018년 가을호)가 변상욱 CBS 대기자의 글을 통해 심층적으로 다룬 바 있다.⁸⁾ 대체로 남북 간에도 언론중재 제도가 필요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동안 남북 매체들이 발신한 오보와 악의적 보도가 남북 간의 불신을 키운 것은 사실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시정하기 위한 언론중재 제도가 만들어지고 기능하기 위해서는 △정치 체제 △언론 구조 △언론 법제의 차이를 극복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그 가운데 핵심이 바로 필자가 위에서 제기한 남북한 언론자유 의 비대칭성이다. 익명의 KBS 관계자가 지적한 것처럼 현실적 제도적으로 정보의 대외공개를 막고 있는 북한 체제의 특성상, 한국이 우리 내부와 같은 수준의 언론중재제도를 만들 경우 자칫 북한 보도 전반에 대한 우리의 자유를 스스로 속박하는 결과를 낳기 쉽다는 지적이다.

“북한의 기밀법(1997년 제정)은 제2조에서 ‘해당 기관의 승인 없이 공개할 수 없는 중요사실’을 기밀법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언론보도에 대해 남측 위원들이 증거자료나 진술을 요구할 경우 북측 위원들이 이에 응하거나 적극 조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생각해 볼 일이다. 이 외에도 언론의 책무와 본령에 대한 입장도 다르고 보도내용을 판단하는 기준도 상이함이 클 것이다. 또한 반론권의 개념 자체를 갖고 있지 않은 국가통제 언론과 언론을 통제하는 권력부서에 시정과 개선을 요구한다는 것은 명확한 한계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변상욱 CBS 대기자는 전반적으로 남북 언론 교류의 활성화와 제도화, 그중 하나로서의 중재제도 설립에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남북 간에 만남이 필요하고 상호 간 교류의 필요성이 높은 건 사실이다. 그러나 언론사 간 교류나 언론 유관 협의의 교류가 그

8) 변상욱, 앞의 글.

렇게 시급하고 중요한 건 아니다”라며 이 문제를 좀 더 폭넓은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

“과거에 펼쳐진 언론사나 단체의 경쟁적인 비즈니스나 특종보도 경쟁이 재연되는 것보다는 남-북-미-중이 종전과 평화로 함께 다가가는 만큼 실효적이고 내실있는 교류를 해야 할 시점이다.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지속가능하며 항구적일 수 있는 사업에 힘을 모아 나갈 필요가 있다.”

V. 제언과 결론

동서독의 역사적 경험에 따르면 양측의 언론 교류는 통일과 통합의 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 동독 주민들은 분단 이후에도 서독 방송을 비교적 쉽게 수신할 수 있었으며 양국 간 언론과 언론인 교류도 당국 간 합의에 따라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동독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서독 언론들의 정확하고 객관적인 보도는 동독인들의 서독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⁹⁾ 이러한 독일의 앞선 경험은 남한 언론인들에게 남북한 언론 교류의 당위성을 제공하면서 실천에 대한 의지와 희망을 갖게 한다.

특히 대한민국 언론은 일제강점기 치하에서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사회 발전을 추동하는 중요한 행위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민족의 독립과 자유민주주의 수호,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의 진전에 언론이 선도자 역할을 했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바이다. 이와 같은 독일의 경험과 대한민국 언론의 사회적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북한 문제의 해결과 나아가 분단의 극복, 즉 통일의 길에 이르기까지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매우 자명하며 당위적인 명제다.

대한민국 언론이 남북 언론 교류를 통해 ‘북한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느냐는 한반도 미래 전체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북한 문제의 해결을 구체적으로 ‘비핵화 된 북한이 건전한 정상국가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면, 과연 한국 언론은 ‘적극적으로 추동하는 능동적이고 주관적인 행위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현실의 변화를 따라가 공론의 장에 이를 반영하는 다소 수동적이고 객관적인 관찰자’에 머무를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9) 심영섭 (2018), 분단 저널리즘을 넘어서, <언론중재>, 148호; 박주연(2011), 분단 저널리즘 해외사례: 독일-동서독 분단 당시 방송 및 언론의 교류, <관훈저널> 118호,

필자 역시 전자의 역사가 펼쳐지기를 바란다. 하지만 커다란 제한이 우리 내부와 북한 내부에 있다. 첫 번째는 남한 내 정파 간 대북정책의 합의가 부재한 현실이다.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도록, 현존했던 이른바 보수정권과 진보정권은 전혀 다른 대북인식과 처방을 그 정책으로 추진해왔다. 보수정권은 북한을 교육과 교정의 대상으로 보고, 현실 사회주의의 명분을 쓴 퇴행적인 김씨 3대 세습 독재정권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남한 정부와 국제사회가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대로 진보정권은 북한을 포용과 설득의 대상으로 상정하고 북한 체제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대화와 설득으로 북한 문제를 풀어나갈 것을 강조해 왔다. 문재인 정부 역시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연장선상에 있고 현재 언론들이 추진하는 남북 언론 교류는 남북 대화 기초의 정치적 환경 속에서 진척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선거에 따라 정권이 평화롭게 교체된다. 향후 총선이나 대선에서 보수정권이 다수를 확보할 경우 과거의 경험과 현재 정치와 여론 지형에 따르면 대북정책은 다시 원칙을 강조하는 쪽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북한의 대남정책이라는 것이 남한의 대북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¹⁰⁾

“둘째, 북한의 대남정책은 남한 정부의 대북정책에 반응한다(상호성). 북한을 상대방으로 하는 남한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 대남정책의 성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 역대 모든 정권하에서 남북한의 무력 충돌이 끊이지 않았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에도 두 차례 연평해전과 같은 남북 간 무력 충돌이 있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이라는 전대미문의 도발을 감행한 것은 비핵화와 개혁개방 등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반발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한 언론 교류라는 큰 틀의 사회문화 교류가 향후 남한 정권 교체에 따른 대북정책의 변화, 이어지는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의 흐름을 거슬러 독자적으로 생존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말이다.

10) 신석호(2012), <분단 저널리즘 뛰어넘기> 서울: 리북, 64.

두 번째로 현시점에서 북한과의 언론 교류는 보통의 국가 간 언론 교류의 일반성보다는 특수성이 많다는 점에서 보다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¹¹⁾ 교류의 상대방인 ‘북한과 평양의 당국’은 자유세계의 국가와 민주적인 정부와는 다르다. 남북한 언론 교류는 근본적으로 그러한 특수한 북한 당국과 ‘관계를 맺는 일’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닌, 아주 특수한 상대방이 있는 과업이라는 것이다.

모두가 아는 것처럼 북한은 현재 김정은이라는 최고지도자가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독재국가다. 형식적으로는 조선노동당이 지배하는 현실사회주의 국가이고 모든 매체는 관영이다. 노동당 선전선동부의 지휘를 받는 모든 매체는 당과 최고지도자와 당의 권위를 위해 일한다. 그들의 저널리즘은 오로지 진실을 추구해야 한다는 우리가 아는 열린 세상의 저널리즘과 질적으로 다르다는 이야기다.

물론 김정은에게 진정성이 있다면, 향후 전개될 비핵화 과정에서 북한의 민주화와 개혁 개방이 진전되기를 기대한다. 북한이 인권 문제를 해결하고 ‘정상국가’로 변모해 가는 과정에 북한의 언론관도 정상화되기를 바란다. 최고지도자와 당의 권위를 해치더라도 진실이라면 보도하는 민영 매체가 나오고 남한을 포함한 외부 매체들의 자유로운 접근과 취재도 허용되는 상황 말이다.

하지만 우선 당장 북한 당국은 남한 언론들의 제안과 요구를 모두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북한학계에서는 이를 ‘북한 체제의 수용능력이 떨어진다’고 한다. 언론 교류는 정보의 소통을 의미한다. 독재체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다. 남한 언론과의 교류는 자칫 독재 체제의 이완을 가져올 수 있다. 남한 기사를 받아들이는 것도, 북한 기사를 남한에 보내는 것도 그러하다.

그것이 북한체제에 줄 다양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조직을 투자해 통제와 감시가 가능한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남한 기사를 받아들인다면 도대체 어디까지 접근과 취재, 보도를 허용할 것인지, 북한 기사를 남한에 보낸다면 그들을 어떻게 선발하고 감시할 것인지에 대한 내부적인 기준 마련도 필요할 것이다.

이런 북한 당국을 설득하고 개방시켜 나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성급하게 접근할 경우 한국 언론이 가지고 있던 평판과 자유를 희생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11) 신석호(2018), 남북 언론 교류 이전에 우리가 고민해야 할 세 가지, <신문과 방송>, 148호.

것이다. 일부 응답자들이 언론자유 침해의 가능성을 들어 남북언론중재기구 설치에 회의적인 것도 그 때문이다. 언론중재기구까지 가지 않더라도 많은 언론들이 당장 해결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 평양 주재에도 위험이 따른다. 북한 내부 상황을 제대로 취재할 수 없거나 취재 하더라도 신속하고 공정하며 객관적으로 쓸 수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아주 특수한 북한 당국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2012년 1월부터 2년 가까이 AP통신 평양지국장을 지낸 한국계 미국인 진 리 씨(우드로윌슨센터 한국센터장)는 2014년 당시 워싱턴 특파원이던 필자와 만나 “취재를 위해 북한 당국자들과 협상하는 일이 매우 힘들었다”고 털어놓았다. 무엇을 취재해 어떤 보도를 하는지 자유세계에서 허용되는 기본적인 언론 자유가 제한되고 보고 들은 것을 모두 쓸 수 없는 상황은 오해와 비난을 부르기도 했다. 그의 재임 기간 동안 미국 언론계에서는 ‘AP통신이 북한 당국과의 관계를 의식해 정치범 수용소로 상징되는 열악한 인권 상황 등 북한 체제의 부정적인 측면을 눈감거나 호도하고 있다’는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북한과 언론 교류에 나서는 우리 언론계는 물론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고 능력을 키워야 한다. 북한 당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최대한 사실과 진실에 접근하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 어떤 주제에 집중하고 어떤 주제는 피해야 하는지를 가릴 줄 알며, 북한 당국자들을 설득해 사실과 진실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전문기자를 육성하고 취재하는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 평양발 보도들이 서구 저널리즘의 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잠정적인 기간 동안 생길 문제에 대한 공론화와 사회적인 합의도 필요하다. 대한민국 언론의 평양발 기사와,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등 탈북자들의 증언이 다르다면, 매체의 신뢰도 자체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평양 현지발 기사의 특수성을 이해해주지 않는다면 말이다.

이런 저런 상황들을 감안할 때, 한반도 주변 안보 상황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진전이라는 구조적인 진전을 이루더라도 남북 언론 교류는 북한의 특수성을 감안한 충분한 사전 준비와 고민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변상욱 CBS 대기자가 지적한 것처럼 취재하듯 경쟁적으로 북측의 문을 두드리기보다는 개인과 조직, 국가적 차원에서 충분한 성찰을 통해 장기 플랜을 마련하는 지혜와 안목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이번 토론회가 보다 더 진전된 논의를 부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종합토론

사 회 : 정은령(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팩트체크센터장 ·
서울제4중재부 중재위원)

토론자 : 이우영(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왕선택(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김중배(연합뉴스 통일언론연구소 연구원)

지승우(통일부 교류협력국 사회문화교류과장)

토 론 내 용

○ 정은령(사회자)

1부 발제만큼이나 2부 토론도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이분들을 어떻게 다 모셨나 할 정도입니다. 발제까지 할 수 있는 분들인데, 10분밖에 시간을 드리지 못해 아쉽습니다. 이우영 교수님부터 토론해주십시오.

○ 이우영(토론자)

김정은 체제의 북한에서 경제·사회적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는 일종의 ‘김정은식 세계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차원, 교육적 차원은 물론 사회적 차원에서 ‘친인민’의 기치 하에 인민들과 밀착하면서 문화적 융통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선전선동 분야의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문학예술과 언론의 변화도 적지 않습니다. 예컨대, 김정은 시대에 들어 영화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면서 창작이 위축된 반면 2012년 창설된 ‘모란봉악단’ 중심의 음악정치는 강화되었습니다. 언론 부분에서는 노동신문의 변화에 대한 김영주 교수님의 글이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 방송 부분에 대한 변화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뉴스 진행자가 교체되고 영상구성이 변화하였습니다. 특히, 4:3에서 16:9로 화면비율이 변했고, 오락프로그램에서도 ‘명승을 찾아서’, ‘사임당’ 등 남한식 프로그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6시 내고향’ 같은 유형과 먹방 프로그램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적 변화는 김정은의 리더십 메이킹 방식 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젊고 활동적인 지도 방식이 변화를 이끄는 것입니다. 특히 언론의 ‘공개성’ 지향은 정보유통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방증하는데, 북한 인민이 외국문물에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의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생각 중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을 고정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계속 변화하며,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2000년대 사회문화교류의 다양한 분야에 걸쳐 성과를 거두었지만 한계도 많았다고 생각하는데, 언론교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최근 언론교류의 특성과 문제를 과거의 교류와 비교하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교류와 최근 교류 사이의 질적 변화나 콘텐츠의 변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북한과의 교류에서 대칭성에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당·국가체제가 정당한

북한 언론과 독립적인 시민사회를 전제하는 남한 언론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통일이 될 때까지 대칭은 영원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칭성을 추구하기보다는 공동의 합의를 이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단 및 행위 기준의 문제도 있습니다. 북한의 기준과 남한의 기준이 다르며, 북한의 이익 여부가 남한의 이익 여부에 우선시 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보다는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류문제에서는 윤리적 당위성이 현실적 실용성을 압도하는데, 이 두 문제를 구분해야 합니다. 모든 문제를 통일 문제와 결부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먼 통일보다는 상호이해와 평화공존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북한에 대한 과도한 특수화도 문제입니다. 중국 같은 특수한 국가를 갔을 때 상황에 따라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시스템적 차이가 있을 텐데 그럴 때는 보통 그 틀 안에서 해결합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특수성을 과도하게 부각하는데, 이러한 태도는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남북관계가 진전되면서 언론중재 문제는 필연적으로 제기될 것입니다. 또한, 분단 이후 한반도 냉전구조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남북한 언론이 적지 않은 기여를 했음을 고려할 때 언론에 대한 사회적 통제 기제는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북한과의 관계보다는 우리사회의 보편적 언론 질서를 활용해서 사실관계를 판단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동안 북한과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한 것들이 너무 많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 담당 기자가 제일 좋은 것은 언론중재위원회에 갈일이 없다는 것이다’라는 농담이 상징하는 의미를 고민해봐야 합니다. 최소한 북한과의 중재시스템을 논의하기 전에 남쪽에서 먼저 자체적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북한 관련 오보집 발간 추진을 들 수 있겠습니다. 북한의 언론 상황을 이유로 남한 언론의 문제를 정당화하는 것은 일종의 ‘중북주의’라 할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는 누군가 문제제기를 해야 하는데 남북 간 오보에서는 당사자가 북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먼저 북한이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나아가 공동의 중재기구 발족을 논의해야합니다.

남북 간 언론중재 기구나 제도의 추진은 단계별로 남북관계 변화를 주시하면서 준비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개성 연락사무소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발전적 시스템인 것은 맞는데 기존 교류 기조와는 다릅니다. 기존에는 민간에서 주로 교류했고 브로

커가 개입했는데, 개성 연락사무소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스템화되어있는 것이 장점이지만 정부의 통제가 있다는 것은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교류단계에서 언론중재까지는 아니라도 남북언론교류를 지원하는 별도의 조직을 구상해야 할 것입니다.

○ 정은령(사회자)

이우영 교수님께서 신석호 기자님에게 여러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00년대 교류와 현재 교류의 차이점, 비대칭성의 문제는 필요한지, 중재문제에 대해서는 남한이 스스로 먼저 오보를 바로잡는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왕선택 기자님입니다.

○ 왕선택(토론자)

북한 관련 오보는 그 자체로 언론과 언론인의 존재 의미를 부정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특히 대북 정책의 성공을 방해하는 차원에서 해악 요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북한 관련 오보를 방지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과제인데, 왜 그런가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언론이 사회를 선도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자생활을 25년 하면서 반성적으로 돌아해보니 우리 언론의 경우 사회를 선도하지 않고 사회를 반영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언론의 특성을 고려할 때, 사회 변화 없이 언론계만의 반성과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회 구조에서 북한 관련 오보 발생의 원인을 파악하고 원인 진단에 따라 오보 방지책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북한 관련 오보를 생산하는 사회 구조의 특성으로는 적대적 분단 구조, 한미 동맹, 진영 투쟁 구조가 있습니다.

먼저, 적대적 분단 구조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적개심 고취는 무죄라는 인식입니다. 적대적 분단 구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적대 세력에 대해 적개심을 고취하는 내용의 보도는 설사 오보라고 해도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론인은 물론 독자도 이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련 오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한국 사회에서 이적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적대 세력을 미화하는 내용을 보도하는 것은 이적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금기 사항입니다. 국가 보안법에 의하면 위법 조치 대상이기도 합니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보도가 금지된 상태

라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인식하고 언론의 잘못을 따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정보를 통제합니다. 북한 정보를 독점적으로 갖고 있는 정부는 유리한 정보는 유출하고 불리한 정보는 감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필요하면 정보를 조작하기도 합니다. 정부의 정보 통제를 알기 어렵고, 안다고 해도 보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사실을 보도하고 해설하는 것은 적대적 분단 구조에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한미 동맹과 사대주의 논란입니다. 한미동맹을 우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반도의 특수성을 강조하기보다는 미국 중심의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존재합니다. 미국이 북한을 불량국가로 규정하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한국 언론도 북한을 불량국가로 규정하고, 불량국가를 규탄하는 보도는 정당하다는 생각 때문에 약간의 오보는 문제 삼을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존재합니다. 또한, 이중적 적대성 때문에 복잡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미동맹에서 보호국가 역할을 하는 미국은 한국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북한을 불량국가로, 적대국가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한국에게 북한은 적대국가면서 동족의 나라이기 때문에 모순이 발생합니다. 이런 조건에서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한국인의 경우 미국의 적대국인 북한을 적대시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여깁니다.

다음은 한국 언론이 진영투쟁의 포로가 되는 문제입니다. 정치인은 이념적 선명성 경쟁을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대북 정책은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기준선이 됩니다. 그러므로 보수든 진보든 정치인은 각각 자기 진영에서 더 많은 지지를 받기 위해 대북 정책과 관련해 선명성 경쟁을 해야 합니다. 한편, 전문가는 이론적 수월성 경쟁을 합니다. 학자 등 전문가 그룹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권 후보가 원하는 대북정책을 제공하면서 학문적 수월성을 과시하기 위해 대북 정책을 운색 또는 왜곡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북 정책과 관련한 담론은 더욱 편향성을 띠게 됩니다. 언론인은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경쟁합니다. 언론인은 정치권으로부터 편향된 정보를 받거나 학자 등 전문가로부터 운색된 해설을 받고 이것을 운문하는 과정에서 심한 왜곡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 각종 정보와 주장 등은 정치인 단계, 전문가 단계, 언론인 단계에서 3단계로 운색, 왜곡됩니다. 안타까운 점은 이런 일이 각자 자신이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대적 분단 구조와 관련한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언론인뿐만 아니라 여론 주도층 모두 기존 북한 관련 지식이 매우 편향됐다는 사실을 인

식해야 합니다. 한미동맹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과 한국과 미국의 국가 이익 구조가 다르다는 점 역시 교육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북 정책을 진영 투쟁 소재로 활용하지 않도록 정치인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에서 정치권, 언론계에 지속적으로 해당 논의를 상기시키고 교육을 해야 합니다. 언론의 변화가 사회변화를 선도할 수는 없습니다. 사회가 기본적으로 변해야 여러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정은령(사회자)

지금까지 언론이 사회변화를 선도하지 않는다는 역할을 말씀하시면서 오보의 원인으로 사회구조를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배 연구원님입니다.

○ 김중배(토론자)

왕선택 기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언론은 사회적인 구조를 반영한다고 했는데 상당한 고민이 깔려있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자기면피성 발언으로 들릴 수도 있겠으나 언론만의 힘으로는 부족하고,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실제 남과 북이 오랜 역사에 쌓아온 불신과 적대적 체제의 대립, 한반도가 처한 지정학적 현실은 지금의 보도 관행 등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한계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리선권-냉면발언이 최근 언론에서 보도됐습니다. 한국의 기업가들을 상대로 경협을 요청하는 자리에서 '냉면이 목구멍에 넘어갑니까'라는 강압적인 발언을 했다는 보도였고, 이에 극도로 반발하는 여론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그 발언이 있었는지조차도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이 보도는 남북 간의 화해분위기를 해치는 가짜뉴스라 할 수 있습니다. 팩트 체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개별 언론사가 이러한 보도 분위기를 뒤집을 수는 없고, 이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또 하나의 사례로 최근 백두청송위원회라는, 특별히 그러한 명칭을 가진 단체가 김정은의 답방을 앞두고 서울 시내에 등장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윤문이라는 명분으로 자극적인 제목을 달고 기사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단체가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단체냐, 또는 그에 대한 생각이 주류적인 생각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언론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름만 부각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인터뷰한 비전향장기수 박종린 선

생님도 이런 보도는 대중을 오도할 수 있다고 한 바 있습니다. 자극적인 보도가 아닌 전반적인 상황을 토대로 대중이 종합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보도를 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두 발제자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주 교수님에게 두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북측 언론은 정론성, 남측 언론은 보도성이라는 언론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다른 두 언론이 절충점을 찾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북쪽에 상주 평양특파원 지국을 개설하려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개설이 의미가 있는지 교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신석호 팀장님에게도 질문하겠습니다. 경쟁적으로 각 언론사가 북측의 문을 두드리기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미디어 시장이 급속하게 재편되면서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이라 언론사 간 이해관계가 충돌할 텐데, 이러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협력이나 공론장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 우려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정은령(사회자)

기자들에게 자구적 팩트에 대한 집중보다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음은 지승우 과장님이십니다.

○ 지승우(토론자)

북한 언론이 많이 변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남북교류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활발하다가 이후 뜸해졌고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다시 활발해졌습니다. 공동연락사무소 문제로 북측과 연락을 많이 했었는데, 제일 부담스러운 것이 북측이 남측 언론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로 우리 언론보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론에 대해서는 개입할 수 없다는 설명을 일관되게 합니다. 남측과 북측은 언론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다르지만 북측에서도 우리 언론에 대한 이해도가 낮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언론보도로 인해 교류협력의 균형이 무너지지 않도록 많은 기제들이 발전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국 문제에 관해서는, 일본이나 중국은 지국을 두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두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북측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지국 운영 방안을 상세화해야 합니다. 아직까지는 대주제만 있고 어떻게 운영이 된다는 것인지 구체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구체화를 해도 취재활동 중 분명 제약이 따르고, 이런 사실들이 드러날 텐데, 이에 대해서는 중재가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이런 과정은 서로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북측에서의 활동의 제약을 인정해주고 언론이 이 부분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을지, 합의가 되는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른 나라의 지국들이 평양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그러한 사례들이 축적되면 우리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생길 것이라 예상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국 문제를 구체화시켜야 논의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은령(사회자)

실무당국자이기 때문에 말씀하시기 조심스러우실 텐데, 지국 개설 문제에 대한 논의, 그리고 남북 간 언론에 대한 상호 이해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발제자에 대한 많은 질문과 코멘트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주(발제자)

창원에서 테니스를 치다 북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북한에 석유가 매장되어있고, 희토류도 매장량이 세계 2위고 우라늄도 생산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방 일간지 기자가 그런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하면서 논쟁이 발생해서, 제가 구글에서 외국 언론이 쓴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희토류와 우라늄에 대한 정보는 확인이 되지만 석유는 아직 의견이 갈립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현직 기자들이 저보다는 정보가 많지 않겠습니까.

사실이나 아니냐의 문제, 팩트에 대한 이야기, 벨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이 반 있다는 것은 팩트지만 반이나 있다는 것은 벨류입니다. 의견은 다양할 수 있지만 팩트에 대해서는 검증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사에서 팩트에 문제가 있는 것은 오보를 넘어 허보에 가깝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뉴욕타임스나 월스트리트저널에서도 오보를 합니다. 오보는 누구나 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허보, 즉 가짜뉴스인데, 크로스체크가 어렵기 때문에 이 허보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북한에 있는 자료는 특히 크로스체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북한 언론 공부를 30년 해도 그렇습니다. 북한에는 대표적으로 개성신문, 남포신문이 있는데, 모두 일

간지로, 2000년대 초반까지는 확실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광명대백과를 참고해도 두 신문이 있는지 크로스체크가 안 됩니다. 짐작건대 2003년이나 2004년에 직할시에서 특급시로 바뀌면서 개성시가 황해북도로 편입되고, 남포시도 평안남도로 합쳐지면서 없어졌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크로스체크가 안 됩니다.

6자 회담을 하는 국가 중 우리나라만 통신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연합뉴스가 기간통신사라 평양주재사무소를 논의하는데, 북한으로부터의 신뢰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북한에서도 우리 언론사 별 성격, 논조 등 여러 차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신석호(발제자)

지승우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 언론중재기능을 이미 통일부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남북 화해 분위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지만 올해는 적어도 대화의 수혜를 언론도 받았습니다. 남북관계가 좋지 않을 때는 우리 측의 오보에 대해 해당 기자의 이름을 밝히면서 스스로 재판하고 선고하고 그랬습니다. 남북 대화 국면에서는 불만을 지 과장님을 통해 하니까 나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우영 교수님께서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의 남북교류와 지금의 남북교류의 비교를 말씀하셨습니다. 10년 동안 많은 교류가 있었지만 중단되고 9년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끊어졌던 교류의 경험을 회복하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교류하던 주요 인사들은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북쪽도 나름 시스템을 재건해가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남북한 언론의 대칭성 문제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을 오가면서 기사를 쓰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협상입니다. AP통신 평양지국으로 지국장으로 갔던 Jean Lee 씨를 포함하여 각국의 기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은 원하는 말만 하고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취재하면 부족합니다. 그래서 북한 당국자와 더 많은 공개를 위해 협상을 하는 동시에, 남측의 데스크와도 취재 내용에 대한 협상을 합니다. 그렇기에 당분간은 언론인이면서 협상가라는 정체성을 다지는 언론인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당국자와 해당 분야 전문가와 기자들이 끊임없이 소통을 해야 합니다. 협업을 하면서 그들만의 그룹,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권이 자주 바뀝니다. 정권이 정보를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집단의 사람들, 당국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북한보도를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배려

해야하는데, 오히려 정보를 가지고 자기편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사라져야 하고, 대신 전문성과 양식을 가진 전문가들이 소통을 하고 그룹을 형성하여 민망한 짓을 하는 사람은 자율적으로 규제해야 합니다. 언론중재기구라는 제도보다도 언론계와, 북한을 전공하는 전문가 집단의 자율규제망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통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는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토론을 시킵니다. 북한전문기자라는 동료의식을 바탕으로 각 사의 전문기자들이 모여 공익적 일을 도모하겠다는 생각으로 토론이 이뤄집니다.

○ 정은령(사회자)

플로어에 계신 참석자 분들 모두 진지하게 말씀을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토론 주제에 대해 말씀하시고 싶으신 분은 코멘트 해주셔도 좋고 질문해주셔도 좋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인태(성균관대학교 학생)

왕선택 기자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토론을 듣고 해외에 상주하는 특파원들의 보도가 떠올랐습니다. 미국 특파원들이 특정 언론의 여론을 미국 전역의 여론이라고 보도하는 상황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이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건강하게 인식하도록 교육해야한다고 했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교육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언론은 사대주의에서 탈피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 왕선택(토론자)

우리나라에는 보수적 입장을 따르는 언론과 진보적 입장을 따르는 언론이 있고, 각사에서 미국에 특파원을 보냅니다. 우리 언론은 자유주의 언론으로서 나름대로 진보적, 보수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균형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언론의 자정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했을 때, 저는 회사의 도움으로 전문기자라는 타이틀을 갖고 이 분야에서 정권에 관계없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보수정권 때도 지금과 같이 회사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았습니니다. YTN은 다른 언론사에 비해서는 북한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7년째 전문기자를 하고 있지만 전문기자가 오보방지의 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전문기자는 언론 내 해결책의 일부를 차지할 수 있으나 사회전체의 변화가 더 중요합니다. 만약 전문기자가 적대적 분단관계의 포로가 된다면, 한미동맹을 신성시하는 진영의 포로가 된다면, 보수나 진보 진영의 투사가 된다면, 전문기자는 오히려 막을 수 없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보도준칙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어떤 조항은 진보진영, 어떤 조항은 보수진영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는데, 어느 한 쪽의 입장이 반영된 것은 준칙이 아닙니다. 보도준칙이 없는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가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 최은아(6·15남측위원회 사무처장)

대북보도의 특수성에 기대 언론 스스로 해야 할 일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논의에 공감합니다. 우리사회에서도 언론의 보도문제와 관련해 자정능력을 보여준 몇 가지 사례가 있었습니다. 재난 피해자를 보도할 때 제기되는 인권문제나 언론소비자 문제에 이어 최근에는 성 평등적인 관점에서 차별적 표현을 지양하는 노력 등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대북보도의 오보문제와 관련해서도 언론내부의 문제의식이 있을 것이고 토론도 했을 텐데, 보도준칙 형태가 아니라면 언론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 신석호(발제자)

분단 저널리즘 뛰어넘기라는 책은 이런 고민에서 썼습니다. 사회가 기자들을 감시하면서 못하면 질책하고 잘하면 환호하는데, 이런 현상은 기자들의 전문성 때문으로 생각합니다. 기자들이 전문성을 버릴 때, 당연히 비난받아야 마땅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도 그런 감시 제도 중 하나입니다.

기자들은 전문가라는 생각을 해야 하고 그 핵심은 회의주의에 있습니다. 모든 정보에 대해 의심하고 크로스체크를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전문가적 회의주의를 가진 언론인 집단, 양식을 가진 전문가들, 양질의 당국자들이 정권에 관계없이 계속 있다면, 그들이 그룹을 이루고 자율규제를 통해 오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왕선택(토론자)

북한 관련 오보에 대해서는 부끄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정노력을 하느냐고 하면, 단적으로 말해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지면과 화면을 채우는 데 급급합니다. 신입기자는 데스크에게, 부장은 국장에게 질책을 받고 국장은 시청률이나 판매부수에 대한 압박 때문에 이 보도가 관심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언론은 사회를 선도하지 않고, 사회를 반영합니다. 내 보도가 사회적 관심을 받는가하는 문제가 광고와 연결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미디어오늘이나기자협회와 같이 언론감시 전문매체에서 하는 비평을 통해 자극받는 것이 유일한 자정노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북한 오보 문제의 주체는 북한인데, 북한에서 오보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인들은 오보가 나도 별 대응을 하지 않고 스트레스 없이 오보를 냅니다. 이런 상황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보도준칙도 답이 아니고 결국 교육이 답입니다. 우리사회가 집단지성을 발휘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정치인들이 선명성 경쟁, 전문가 이론의 윤색, 이후 언론인들의 영향력 있는 유포와 같은 오보의 유통구조를 해결해야 합니다. 정치전문가, 언론인, 북한문제 당사자를 상대로 끊임없이 문제를 주지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보대응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취재 조건이 마련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취재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한 뒤 오보가 나면 비난이 가능한데, 자율적 취재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오보에 대한 비난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나름대로 수준 높게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답으로 교육을 들 수 있으며, 교육주체로는 통일교육원, 언론중재위원회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북한전문가 등의 지혜를 모으면 북한 관련 오보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 김중배(토론자)

한 가지 덧붙이면 우리사회에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기자들 문화가 바뀌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출근해서 늦게까지 근무하는 연합뉴스의 통신기자들도 처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기자들은 너무 바쁘면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변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보의 가능성, 북한을 취재할 수 없는 정보접근의 제약성, 한계 등을 절감하면서 정확한 정보를 내보내겠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우리 언론들도 돌아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정은령(사회자)

토론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주제가 남북 간 오보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이었지만 그 오보가 생산될 수 있는 큰 구조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논의되었습니다. 남북 간 언론교류에 대한 전문가들이 나오셔서 밀도 있는 논의가 되어서 저도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이석형 위원장님께서 토론회 정리발언 해주시겠습니다.

○ 이석형 위원장

매우 진지하고 열띤 토론을 해주신 일곱 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주제발표를 해주신 김영주 교수님, 신석호 박사님, 토론주자로 나서주신 이우영 교수님, 왕선택 전문기자님, 김중배 연구원님, 지승우 사회문화교류과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일곱 분들의 성과 이름을 보니 전체 스물한자인데, 김씨 분이 두 분이고, 영과 우자 이름자가 겹친 것 외에는 다 다르십니다. 자유토론에 정말 걸맞은 분들이 참여해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 소감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토론을 경청하면서 첫 번째는 남북한의 언론의 격차가 이토록 심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다양한 생각과 지식을 가지고 자유롭게 토론했는데, 과연 북에서는 이런 토론회가 있을 것인가 생각해봤는데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격차가 확연하게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는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남북 간 언론교류의 필요성이 참으로 절실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남북 간 오보의 극복을 위한 인식의 전환과 교육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당위적으로 남북 간 언론문화의 동질성을 형성하고 협업하는 것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과제라 생각합니다. 이런 당위성에 대해서, 우리 남북 민족에 대해서 시를 쓰신 분이 계십니다. 문병란 교수님의 ‘직녀에게’라는 긴 시가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만 발췌를 해서 낭송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은하수를 건너야 한다.

오작교가 없어도 노돛돌이 없어도

가슴을 던고 건너가 다시 만나야 할 우리

칼날 위라도 딛고 건너가 만나야 할 우리
이별은 이별은 끝나야 한다.
말라붙은 은하수 눈물로 녹이고
가슴과 가슴을 노뎃돌 놓아
슬픔은 슬픔은 끝나야 한다. 연인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은령(사회자)

이석형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MEMO

MEMO
